프리미엄 리포트 종합편 · 2026. 11.

美 중간선거 이후의 산업 지형

분점정부 2년 — 미디어·통신·AI·사이버보안·콘텐츠의 정책 전망과 한국 산업의 대응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확보했다.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규제기관의 정책 집행과 의회의 감독·예산 협상이 산업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43건과 민주당 정책 30건의 추진 전망을 비교하고, 다섯 분야의 공통 쟁점과 한국 기업의 사업·투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분야

미디어·방송·플랫폼 / 네트워크 통신 / AI·AX·데이터센터·반도체 /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 콘텐츠·IP

정책 판정

좌초 · 약화 · 지속 · 부상 · 상징적 · 미정 — 입법 필요성, 행정부 권한, 예산·소송, 초당적 지지를 기준으로 추진 가능성을 평가

자료 기준

2026년 11월 공개 자료 기준. 세부 기준일은 본문·부록에 표시 — 선거 결과는 AP 등 주요 언론의 판정, 정책·거래는 공식 문서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

01 **의회 다수당 교체가 곧 정책 전환을 뜻하지는 않는다.** 새 입법이 필요한 행정부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지지만, 기존 법률과 규제기관 결정에 근거한 정책은 상당 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분석 대상 43건은 좌초 12건, 약화 12건, 지속 16건, 미정 3건으로 분류했다. 민주당도 상원 다수만으로 일반 법안의 토론 종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한다.

02 **감독·인준과 예산·법률 연장이 주요 협상 수단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자료 요구와 인준 심사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세출법·NDAA, CISA 2015와 FISA 702 관련 후속 입법은 집행 조건과 감독 장치를 협상할 계기다. 다만 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된다. 특히 2026년 말 만료 사안은 레임덕 의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 의회의 과제가 달라진다.

03 **규제기관의 권한과 결정 절차가 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방송사 소유 상한 폐지, 넥스타–테그나 합병, ABC 면허 심사, 정치광고 최저단가 확대, 주정부 통신·AI 규제에 대한 연방 개입은 권한과 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의회 감독과 법원 심사는 승인 조건과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은 규제기관의 결정뿐 아니라 집행정지·본안·항소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04 **주법과 소송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다.** 포괄적인 연방 입법이 지연되는 분야에서는 주정부의 규제와 집행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AI 투명성, 아동안전, 개인정보, 광대역 요금과 플랫폼 설계 책임이 대표적이다. 기업은 기존 연방법을 준수하면서 사업 대상 주의 의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개별 판결과 새 연방법이 주법의 적용 범위를 바꿀 가능성도 중요하다.

05 **한국 기업에는 고객의 투자 일정과 비용 부담이 핵심이다.** 선거 직후 AI·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은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과 전력 접속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보여줬다. 한국 기업의 실적을 좌우할 것은 해당 공약의 실제 시행 범위, 고객사의 설비투자 변경, 발주·인도 일정이다. 주가 반응과 사업 영향을 구분하고, 계약상 비용 전가와 대금 회수 조건까지 점검해야 한다.

디지털미래연구소 Digital Future Institute dfi.re.kr

CONTENTS

목차

00 종합 요약 — 핵심 결론과 다섯 가지 판단 · 선거 직후 증시 변동 · 통합 판정표 2

01 권력 구조와 수단 — 분점정부의 작동 방식 10

02 거시·통상·금융 환경 — 관세·환율·금리·보조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3

03 분야별 판단 — 미디어 · 통신 · AI·AX · 사이버보안 · 콘텐츠 16

04 공통 쟁점 — 다섯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변화 27

05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 — 산업별 기회·부담과 정책 과제 30

06 주요 일정 — 주요 결정 시점과 확인 사항 34

부록 정책 판정 기준 · 분석 범위 · 주요 출처 36

00 · 종합 요약

분석의 결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산업 정책을 일괄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입법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고, 규제기관의 정책도 상당 부분 행정부가 주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막거나 수정하고, 청문회·자료 요구·인준 심사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예산과 시한이 있는 법률의 연장 과정에서는 집행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새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지고, 법적 근거가 약한 조치는 감독과 소송으로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기존 법률과 기관 결정에 근거하거나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정책은 대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실적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함께 고객사의 투자, 전력 확보, 경쟁자의 진입, 계약·규제 준수 비용이 영향을 준다.

이 보고서를 읽는 법

각 분야는 **핵심 판단 → 정책별 판정 → 산업 영향 → 분야 간 연관성 →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순서로 구성했다. 판정은 법적 효력이 아닌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다. 판단을 바꿀 주요 결정은 06장 일정표에 정리했다.

43 건

트럼프 행정부 정책 평가 항목. 4개 분야 합산·중복 포함

12·12·16

좌초·약화·지속. 미정 3건 별도

30 건

민주당 정책. 부상 19·상징적 11

54 : 44

상원 의석·미확정 2석. 하원 민주 250석 이상

※ 정책 건수는 서로 다른 정책의 순수 개수가 아니라 분야별 평가 항목의 합계다. 의석수는 보고서에 사용한 집계 시점 기준이다.

KEY POINT · 종합편의 관점

분야별 리포트가 개별 정책의 향방을 분석했다면, 종합편은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 예산 협상, 사법심사, 주별 규제, 투자·전력 여건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같은 정치적 변화라도 방송사 소유규제, 주파수 공급, 데이터센터 건설, 위협정보 공유, AI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정책마다 필요한 법적 권한과 예산, 승인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정당의 입장뿐 아니라 실제 결정을 내리는 기관과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가지 핵심 판단

①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좌초하고, 행정부·FCC 전속 권한은 지속된다

네 분야에서 판정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 43건(분야별 영향 건수) 가운데 좌초 12건은 예외 없이 의회 입법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주 AI법의 포괄적 적용 배제, 특정 재원의 영구 삭감·환수, 조건부 정보공유법 연장 등 의회의 동의나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중심이다. 일부 정책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므로 분야별로 중복 평가했다. 반대로 '지속'으로 분류한 16건에는 법률에 근거한 주파수 공급과 관세, 행정명령에 따른 AI·사이버 정책, 초당적 지지가 있는 대중국 공급망 규제 등이 포함된다. D2D 규제 완화처럼 최종 규칙과 승인 조건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예산·입법 협상·인준·감독을 통해 집행 속도와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예산과 시한이 있는 법률의 연장은 민주당의 주요 협상 수단이다

세출법·국방수권법(NDAA), 정보공유·정보수집 권한의 후속 입법은 행정부도 처리를 필요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협상하면서 예산 배정, 개인정보 보호, 보고·감독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의 적용을 받는다. CISA 2015의 임시 연장 만료일인 2026년 12월 11일은 새 의회 출범보다 앞선다. 레임덕 의회가 장기 연장하면 민주당의 협상 여지는 줄고, 단기 연장하면 다음 만료일이 새 협상 시점이 된다. FISA 702는 법률상 수권과 기존 법원 인증을 구분해야 하며, 2027년 3월 인증 만료를 앞두고 후속 권한과 감독 조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③ 규제기관의 개별 판단이 늘면서 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트럼프 2기 규제기관은 사전에 정해진 일률적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 사안을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을 확대해 왔다. FCC의 방송사 전국 소유 상한(39%) 폐지와 개별 심사 전환이 대표적이다. 넥스타-테그나 합병 승인, 정치광고 최저단가(LUC) 적용 범위 확대, ABC 소유 방송국의 조기 재허가는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사무국에 위임된 권한으로 추진됐다. 다만 합병 심사의 DEI 조건, 캘리포니아 최종공급의무(COLR)에 대한 연방 우선 적용, BEAD 재구조화는 결정 주체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GAO가 BEAD

재구조화를 '규칙'으로 판단한 것은 그 조치에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의회는 감독 청문회로 이 결정들의 근거와 절차, 위임 권한의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자료는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27년에는 디즈니의 FCC 상대 소송, 소유 상한 폐지 집행정지 신청, 넥스타-테그나 소송(배심재판 7월), LUC 분쟁, 디지털형평성법 소송, 행정명령 14365호의 BEAD 지원 조건, 캘리포니아 COLR 우선 적용 사건의 진행 상황이 정책 향방을 판단하는 변수가 된다. 사건별 일정과 쟁점이 달라 모든 사안의 최종 결론이 2027년에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연방법과 함께 중요해지는 주법·소송 대응

이 보고서는 포괄적인 연방 AI·프라이버시 규제와 망중립성 입법이 2028년까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동안전 분야도 포괄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개별 보호 조치나 NO FAKES 같은 특정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기존 COPPA와 FTC법 5조도 계속 적용된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AI·프라이버시 규제와 광대역 요금 규정, 플랫폼 설계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기업의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개별 배심 평결을 전국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BEAD 자금 지원 조건을 통해 주 AI법을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연방법뿐 아니라 진출한 주의 법률과 관련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산업 투자는 전력·수요에 좌우되고, 주가는 정책 전망에도 반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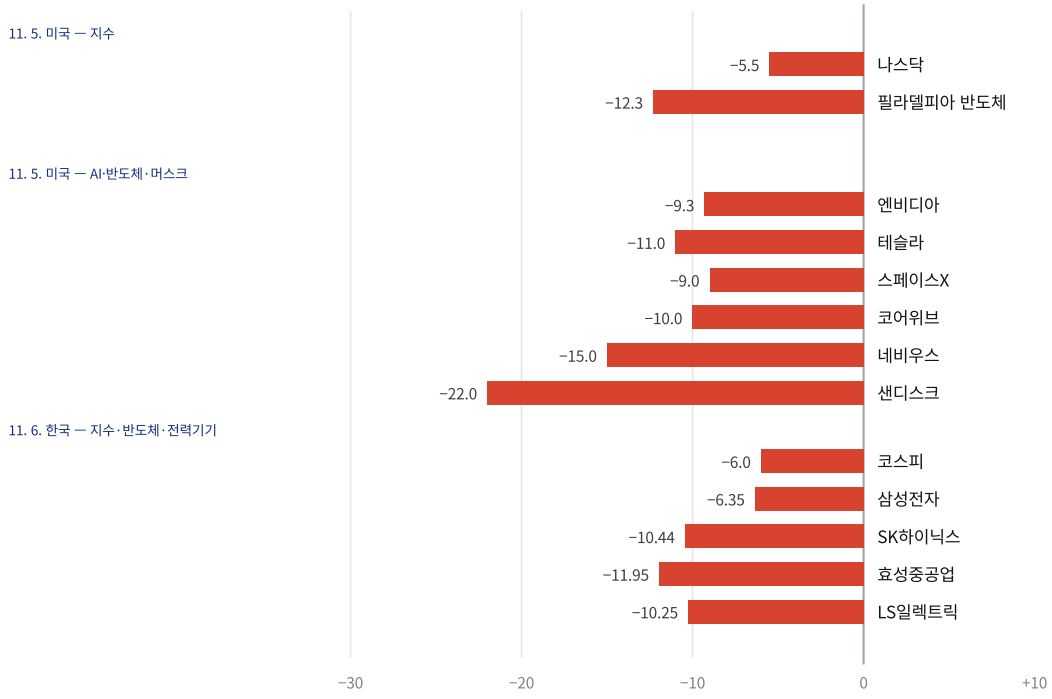
AI 설비투자 확대, 위성통신의 경쟁 심화, 메모리 가격 상승은 선거 전부터 진행됐다. 선거 이후에는 의회의 감독과 주정부의 인허가·요금 정책이 이 흐름에 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접속과 지역의 건설 제한이, 통신은 위성 사업자의 진입과 제휴 조건이 주요 변수다. 투자 전망을 평가할 때에는 기업별 설비투자의 집계 기준을 맞추고,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과 실제 가동 가능한 용량을 구분해야 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도 반도체 생산업체에는 이익이지만 장비·디바이스 업체에는 비용 부담이 된다. 주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정책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움직인다. 다만 선거 직후의 하락을 규제 우려만으로 설명하거나 과도한 반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 절에서는 선거 직후 48시간의 시장 움직임과 당시 제기된 정책 우려를 구분해 살펴본다.

> 선거 전부터 진행된 네 가지 변화 — 선거의 영향을 평가하려면 구분할 것
>
> ① **전력 공급 제약**: 텍사스 ERCOT의 접속 제한과 뉴욕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은 선거 전에 시작됐다. 선거 이후에는 기존 제한의 유지·변경과 추가 규제 여부가 쟁점이다. ② **스트리밍 전환과 정치광고 주기**: 지상파 시청 비중의 하락은 장기 추세다. 2027년 정치광고 감소도 선거 결과보다는 선거가 없는 해의 광고 수요를 반영한다. ③ **AI 설비투자 확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선거 전에 이미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집행 규모는 전력 확보, 고객 수요,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주법과 플랫폼 소송**: 주정부의 프라이버시 규제와 플랫폼 설계 책임 소송, 메타의 합의는 연방의회 선거와 별도로 진행돼 왔다. 본문은 이러한 기존 추세에 선거 이후의 감독·입법·인허가 변화가 어떤 영향을 추가하는지 살펴본다.

선거 직후의 증시 변동과 정책 우려 — 11월 4일~6일

선거 다음 날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이튿날 AI·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 시기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공약과 의회의 AI 입법 계획이 투자 우려로 제기됐다.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전력기기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그림 1. 11월 5일(미국)·6일(한국) 주요 지수·종목 등락률 (%)



CNN·CNBC·Reuters·NPR·Yahoo Finance(11. 5.~6.), 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뉴데일리(11. 6.~7.). 미국 종목은 11월 5일 종가를 원칙으로 했으나 스페이스X·네비우스 등 일부는 장 후반 보도치이며, 한국 종목은 11월 6일 종가다. 기준이 다른 막대는 참고용이고 종가 기준 수치는 2판에서 통일한다. 11월 6일 미국 증시는 반등했으나(나스닥 +1.1%, 반도체지수 +4.2%, 엔비디아 +3.9%) 주간으로는 4주 연속 하락했다.

−5.5%

11. 5. 나스닥 (−1,421p, 24,315). 19개월 만의 최대 낙폭, 조정 국면 진입, 4주 연속 하락. S&P 500 시가총액 약 3조 달러 증발

−12.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엔비디아 −9.3% (4,000억 달러, 2025. 1. 딥시크 이후 최대), 인텔 −10.3%, 샌디스크 −22%

−11.0%

코스피 11. 5.~6. 이틀 누적. 6일 −6.02%(5,059.69), 장중 −8.55%로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 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이틀 연속. 외국인 주간 10.6조 원 순매도

−18.9%

SK하이닉스 이틀 누적(6일 −10.44%, 113.2만 원). 삼성전자 −13.44% (18.87만 원). 효성중공업 −12.0%, LS일렉트릭 −10.3%

KEY POINT ·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우려가 관련주에 집중됐다

주가 하락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매출을 기대해 온 기업에 집중됐다. 엔비디아와 메모리 업체,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AI 클라우드 사업자,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체가 대표적이다. 반면 아마존·알파벳·메타는 선거 다음 날 상승했다. 투자 지연은 공급업체에는 매출 감소 요인이지만, 하이퍼스케일러에는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정책 변화라도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투자 지연 우려를 키운 세 가지 요인. 첫째는 주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다. 텍사스의 이노호사 당선인은 전력·수자원·지역 보호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애벗 주지사도 9월 21일 주정부 허가를 중단하고 12월 전력망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아·오하이오·네바다·미시간 당선인들도 조건부 중단을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 미국의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 중 45%가 집중돼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모두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주의 인허가 정책이 투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제퍼리스는 텍사스의 13.3GW를 위험에 노출된 용량으로 봤다.

둘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다. 관련 주민투표 41건 중 40건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다. IDCA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린 프로젝트는 46개, 투자 규모는 1,700억 달러였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부지 확보와 지역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민주당 의회의 AI 입법 계획이다. 로이터는 11월 6일 전기요금 보호, 프론티어 AI 모델의 독립 안전검사, AI 관련 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안들이 1월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마이크론의 대만 신규 공장 건설 일시 중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외부 클라우드 계약 재검토가 겹쳤다. 금리 인상 우려와 신용투자자의 반대매매도 주가 하락을 키웠다.

종합편의 판단 · 연방 입법보다 주정부 인허가와 투자 계획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사업 일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정부의 신규 승인 제한과 전력망 접속 지연이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 의결 요건 등을 고려할 때 2028년 이전 성립 가능성을 낮게 본다. 반면 주정부의 인허가 결정은 개별 데이터센터의 착공과 가동 시점을 바꿀 수 있다. 선거 전부터 이어진 전력·인허가 제약에 당선인들의 추가 제한 공약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투자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업과 투자자가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하이퍼스케일러가 설비투자 계획을 실제로 줄이는지, 투자 지연이 반도체·전력기기 업체의 수주와 매출 전망을 낮추는지다. 신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별 지연이 누적되면 공급업체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 5~6일 관계 회의를 열어 시장 반응이 경제의 기초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해 반대매매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단기 수급 불안을 줄이는 조치이며, 관련 기업의 실적 전망은 미국의 투자 집행 여부에 달려 있다.

> 이번 주가 하락은 규제 강화와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실제 실적 변화보다 먼저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027년 통신·AI·반도체 업종에서는 연방 입법의 진행 상황과 함께, 주정부의 인허가 결정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표 1. 통합 판정 매트릭스 — 트럼프 행정부 정책 43건과 민주당 정책 30건 (분야별 영향 건수 기준)

분야	판정	정책
트럼프 행정부 정책 — 좌초 12 · 약화 12 · 지속 16 · 미정 3		
미디어·방송·플랫폼	좌초 4	AI 주법 선점 입법 · 아동안전법과 AI 선점의 '묶음' · 230조 '검열' 재해석 입법 · 공영방송 재원 '영구 0원'
	약화 4	ABC 면허 박탈(조기 재허가의 결론) · 합병 심사의 정치화(넷플릭스-WBD 과정) · 정당·공동모금위 LUC 확대 · FCC 공화당 단독 인사
	지속 3	39% 소유 상한 폐지(법원이 결정) · 뉴스 왜곡 조사·조기 재허가 '심사 중' 상태 · 영화 관세 위협·위원 해임권
네트워크 통신	좌초 3	주 광대역 요금규제의 연방 선점 입법 · 디지털형평성법 재원 취소의 영구화 · BEAD 잔여 210억 달러 국고 환수
	약화 5	BEAD 미집행 잔금의 AI 주법 연동(EO 14365) · 합병 승인의 DEI 조건화 · 캘리포니아 COLR 선점(구리망) · 라이프라인 자격 축소 · FCC 3 대 1 인사
	지속 5	BEAD 기술중립 재구조화 · 주파수 파이프라인(상부 C밴드 2027. 7.) · 위성 D2D 완화·스타링크 모바일 승인 · 대중국 공급망 규제 · 망중립성 부재·'규제 삭제'
AI·AX·통상	좌초 2	연방 AI 주법 선점 입법 · 포괄적 연방 AI 규제법
	지속 3	AI 행동계획·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EO 14318) · 제네시스 미션(EO 14363) · 232조·301조 관세
	미정 3	대중국 AI 칩 수출(H200 허용 vs SAFE Chips 법안) · 301조 과잉생산 관세(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 232조 반도체 2단계 관세·상쇄 프로그램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좌초 3	'검열 금지' 조건부 CISA 2015 장기 연장 · 무개혁 FISA 702 연장 · AI 주법 선점 입법
	약화 3	CISA(기관) 추가 감축(FY2027 7.07억 달러) · 선거보안 지원 철수 · 사이버 수장 공백 운영
	지속 5	공세적 사이버 전략·민간 참여 · 규제 간소화(CIRCIA 축소·CMMC 2단계 중단) · 통신 사이버 의무(CALEA) 철회 · 프론티어 AI 자율 협약·SIF · (미디어 편과 공통) 위원 해임권(Slaughter)
민주당 정책 — 부상 19 · 상징적 11		

분야	판정	정책
미디어·방송·플랫폼	부상 5	FCC·백악관 감독 청문회 · KOSA 원안·COPPA 2.0·프라이버시법 · NO FAKES·AI 학습데이터 공개 · 공영방송 긴급경보 예산 · CTV 정치광고 투명성
	상징적 4	소유 상한 복원 입법·CRA · 지역 저널리즘 지원 · 망중립성 복원 · 빅테크 반독점 강화
네트워크 통신	부상 5	FCC·NTIA 감독 청문회 · USF 개편(빅테크 기여) · 허가 개선 입법 · DEA·라이프라인 세출 방어 · 주 요금규제 권한 보호
	상징적 4	ACP 전면 복원 · 망중립성 법제화 · FCC 위원 임기 보장 · 스타링크 승인·보조금 제한
AI·AX·통상	부상 4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보호법(하원 통과, 슈머 우선순위) · 빅테크 감독 청문(OpenAI·Anthropic·메타·구글·스페이스X) · 프론티어 AI 독립 안전검사 입법(트라한) · AI 책임·최소 안전기준 프레임워크(제이콥스·바이어) — 11. 6. 로이터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부상 5	DHS·CISA·정보기관 감독 · CISA 2015 장기 연장 · CISA·선거보안 예산 복원 · FISA 702 개혁 연장 · 프론티어 AI 사이버 대응(보고 의무)
	상징적 3	연방 프라이버시법 · 통신 보안 의무 입법화 · CIRCIA·CMMC 원안 복원
콘텐츠·IP	부상 / 지속	부상: NO FAKES(디지털 복제물 권리) · AI 학습데이터 공개(CLEAR) — 지속: USTR의 망 이용대가 '무역장벽' 기조(행정부 권한)
거시·통상	부상 / 지속	부상: IRA·CHIPS 집행 방어, 연준 독립성 옹호, 부채한도 조건부 협상 — 지속: 232조·301조 관세,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위원 해임권(Trump v. Slaughter)은 미디어와 사이버 양쪽에서 다뤄졌으며 사이버 분야 지속 5건에 포함했다. 건수는 '분야별 영향 건수'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판정된 경우(AI 주법 선점 3회, 위원 해임권 2회, 연방 프라이버시법 2회 등) 분야마다 한 건으로 세었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한 고유 정책 수는 트럼프 행정부 약 39건, 민주당 약 28건(분야별 감독 청문회를 한 건으로 묶으면 약 25건)이다.

그림 2. 분야별 판정 분포 — 트럼프 행정부 정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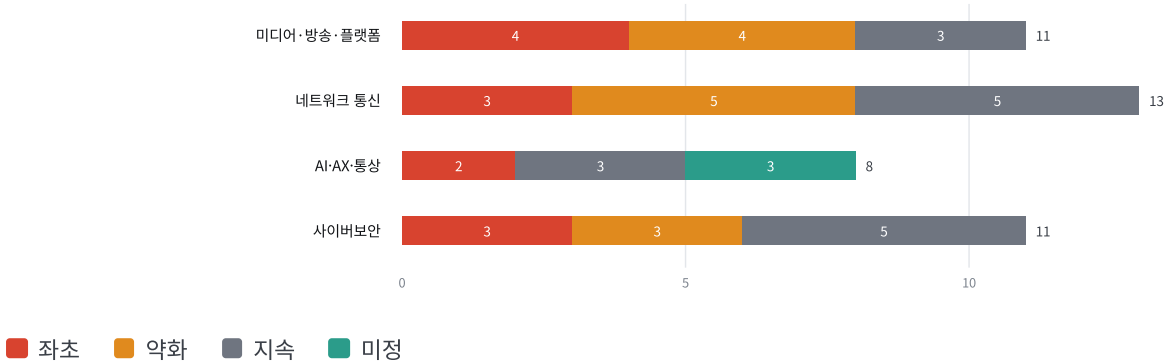


표 1과 같은 기준이다(사이버보안 11건, 위원 해임권 포함). 통신 분야에 '지속'이 많은 것은 핵심 정책이 법률(OBBB)과 만장일치 의결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고, AI 분야에 '미정'이 많은 것은 관세와 수출통제를 결정하는 USTR·상무부가 아직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3. 분야별 판정 분포 — 민주당 정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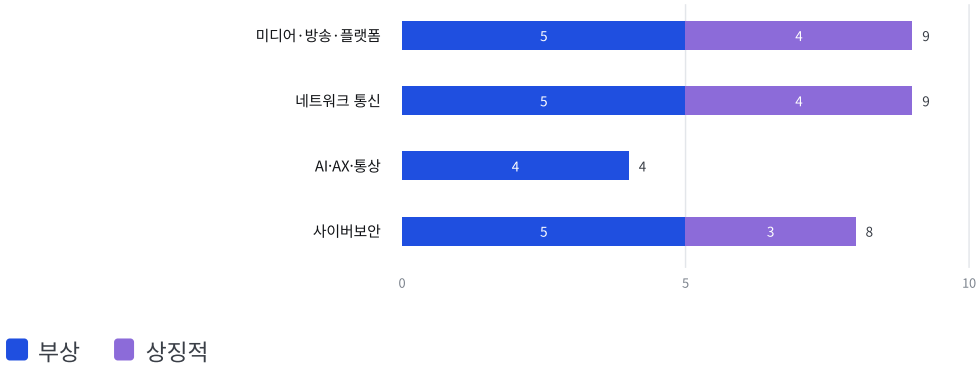


표 1과 같은 기준이다(분야별 영향 건수, 합계 30건). 콘텐츠·IP와 거시·통상은 종합편에서 부상/지속으로만 판정해 건수에 넣지 않았다. 네 분야 모두 '부상'이 '상징적'보다 많은 것은 감독 청문회·예산·인준처럼 대통령 서명 없이 작동하는 수단이 민주당 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이고, AI 분야에 '상징적'이 없는 것은 전기요금 보호법(하원 통과)과 빅테크 감독 청문처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의제가 중심이고, 독립 안전검사·책임 프레임워크 법안은 1월 제출 예정이어서 성립 장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점정부에서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2027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가 공존한다. 다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책을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은 감독, 인준, 세출, 필수 처리 법안, 의회검토법(CRA)에 따른 규칙 폐기다. 이 가운데 대통령 서명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의 감독과 상원의 인준이다. 세출과 필수 처리 법안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므로, 처리 시한을 앞두고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이 된다. CRA도 상원의 신속 처리를 허용할 뿐, 대통령의 거부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산업별 정책 전망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자체보다, 해당 정책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4 석

민주당 상원 의석. 공화당 44석, 미확정 2석. 민주당은 상원 다수를 확보했지만,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250 석 이상

민주당 하원 확보 의석. 과반을 확보해 법안 처리와 위원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단독으로 뒤집을 의석에는 못 미친다

60 · 67 표

상원 입법의 주요 기준. 일반 법안의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거부권 재의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전원 참여 시 67표다. 하원도 별도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2 : 1

FCC 현직 위원의 정당 구성.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 공석 2명.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FCC의 정당 구성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의회의 주요 견제 수단과 산업별 쟁점

표 2. 의회의 주요 견제 수단 — 행사 방식과 한계, 주요 적용 사안

수단	행사 방식과 한계	주요 적용 사안
감독·자료 요구	대통령 동의 없이 조사와 청문회 가능. 결정 경위를 공개하고 정책 변경을 압박하지만, 기존 결정을 직접 취소하지는 못함	FCC의 합병 심사와 승인 조건, BEAD 개편, CISA 인력 감축, 통신망 보안 대응
인사 인준	상원이 후보자를 승인하거나 인준을 보류·거부. 공석 충원과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침	FCC 위원, CISA 국장, 국가대테러센터장 등

수단	행사 방식과 한계	주요 적용 사안
세출·예산 조건	예산 규모와 사용 조건을 법률로 정함.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며,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협상 가능	CISA 예산, 디지털 포용 사업, BEAD 자금의 사용 조건
시한이 있는 주요 법안	국방수권법, 권한 연장, 부채한도 조정 등의 협상에 정책 조건을 포함. 최종 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됨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해외정보감시 권한, 국방 분야 AI 보고 의무
일반 입법·CRA	일반 법안은 상원 토론 종결이 주요 관문. CRA는 일정 요건 아래 신속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적용됨	USF 개편, 아동 온라인 안전, 디지털 복제물 보호, AI·프라이버시 규제

핵심 판단

민주당 의회가 곧바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감독과 인준 심사다. 예산과 법률을 바꾸려면 행정부·공화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제120대 의회 주요 위원회와 예상 정책 의제

표 3. 기술·산업 정책 관련 위원회 — 위원장 유력 인사와 주요 예상 의제

위원회	위원장 유력 인사[1]	주요 예상 의제[2]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마리아 캔트웰(D-WA)	**FCC 정책 감독과 위원 인준** · USF 개편 · 광대역·BEAD
상원 상무위 통신·미디어·광대역 소위원회	벤 레이 루한(D-NM)	**ACP·라이프라인 복원 논의** · 농촌 광대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프랭크 팰런(D-NJ)	**FCC·FTC 감독** · 연방 프라이버시법 ·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소비자 보호 책임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엘리자베스 워런(D-MA, 현 간사)	**연준 독립성** · 플랫폼·가상자산 감독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로버트 가르시아(D-CA)	**스페이스X·테슬라·xAI의 연방 계약과 지원 내역** · 연방기관 IT 관리 평가(FITARA) 재개 여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베니 톰슨(D-MS)	**CISA 감축 경위와 GAO 평가** · DHS 개편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매기 해선(D-NH)	**CISA 국장 인준** · CISA 2015 연장 소관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마크 워너(D-VA)	**FISA 702 재승인과 영장 요건 개정 논의** · 정보 분석의 정치적 개입 여부 점검

위원회	위원장 유력 인사[1]	주요 예상 의제[2]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짐 하임스(D-CT)	FISA 702 재승인과 영장 요건 개정 논의 · 정보 분석의 정치적 개입 여부 점검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D-RI)	**국방수권법(NDAA) — 사이버 조직 개편, AI 보고 의무** · CMMC 개편 감독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D-WA)	국방수권법(NDAA) — 사이버 조직 개편, AI 보고 의무 · CMMC 개편 감독

[1] 위원장 예상은 자료 기준일(2026. 11. 8.) 현재 보도(Nextgov/FCW, IAPP, Broadband Breakfast, Bloomberg Government, 11. 4.~5.)에 따른 것으로, 2027년 1월 각 당의 원내 절차에서 정해지는 정식 선임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 민주당 간사의 승계 관례에 따른 예상이다. [2] 주요 의제는 공개 발언·보도와 위원회 소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굵은 글씨는 각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구체적인 법안과 청문회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독립규제기관의 지위 — Trump v. Slaughter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29일 Trump v. Slaughter 사건에서 6 대 3으로 FTC 위원의 해임을 제한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1935년 Humphrey's Executor 판결을 폐기했다. FTC에 관한 판결이지만, FCC 등 다른 합의제 독립기관에서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 다만 기관별 적용 범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FCC에서는 위원 인준과 임기 만료가 정책 방향을 좌우할 변수다. 현재 공화당 2명·민주당 1명으로 운영되며 2석이 비어 있다.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투만 세버스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11월 10일로 잡아 레임덕 기간 내 인준을 추진하고 있다. 인준되면 공화당 3명·민주당 1명이 된다. 고메즈 위원은 2026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났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계속 재직할 수 있다. 후임 인선 없이 잔류 가능 기간까지 끝나면 민주당 위원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CISA의 문제는 독립위원의 해임 보호와는 다르다. CISA는 2025년 1월 이후 인준된 국장 없이 세 번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도 14개월 만에 약 3,300명에서 2,400명으로 줄었다. 주요 쟁점은 국장 인준과 예산·인력 확보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FCC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상원의 인준, CISA는 지휘부 공백과 예산·인력 여건이 향후 정책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관세·환율·금리·보조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세는 수출 가격과 조달 비용을, 환율과 금리는 해외 매출과 자금조달 비용을 바꾼다. 보조금은 투자 규모와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장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이들 정책과 경제 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섯 분야의 매출·비용·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한다. 03장의 분야별 전망도 이러한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표 A. 거시·통상·금융 여건이 분야별 매출·비용·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야	관세·통상·수출통제	금리·환율·자금조달	정부 예산·보조금·세액공제
미디어·방송·플랫폼	망 이용대가와 플랫폼 규제가 통상 쟁점이 되면 국내 입법과 규제 집행에 대한 협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경기 둔화는 광고 매출을 줄이고, 금리 상승은 콘텐츠 투자와 인수·합병의 자금 부담을 높인다	공영방송·긴급경보 관련 예산의 증감은 제작·송출·설비 사업의 발주에 영향을 준다
네트워크 통신	장비 관세는 구축 비용을 높인다. 중국산 장비 제한은 공급업체 선택에 영향을 주며, 한국 업체도 보안·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리는 주파수 확보와 망 구축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환율은 수입 장비 가격을 바꾼다	BEAD 집행과 USF·라이프라인 지원 수준은 망 구축 발주와 저소득층 통신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준다
AI·AX·데이터센터·반도체	반도체 관세와 수출통제는 판매 가능한 시장, 생산 입지, 칩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리와 자금조달 여건에 민감하다. 투자 지연은 장비·반도체 업체의 매출 시점도 늦출 수 있다	CHIPS 지원금의 지급 일정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는 미국 내 투자비 부담과 자금 회수 시점을 바꾼다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개인정보·보안 규제가 통상 쟁점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현지 규제 준수와 통상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공공사업은 예산 확정·집행 지연에, 민간사업은 고객사의 IT 지출 축소에 영향을 받는다	CISA 등 연방기관의 예산과 조달 계획은 보안 제품·서비스의 공공 수요에 영향을 준다
콘텐츠·IP	디지털 서비스와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은 해외 유통·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달러 매출은 원화 약세 때 원화 환산액이 늘지만, 해외 제작비와 라이선스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미국 내 제작에 적용되는 주별 세제 지원은 촬영지 선택과 제작비에 영향을 준다

관세는 세율뿐 아니라 부과 근거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IEEPA 관세가 무효화된 뒤에는 301조·232조가 주요 부과 수단이 됐다. 두 조항에는 일률적인 관세율 상한이 없으며, 4년 주기의 검토·유지 절차는 301조에만 적용된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15%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특정 조치에 적용되는 수치다. 이를 301조 관세까지 포함한 전체 관세의 상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기존 관세가 자동으로 철회되지는 않는다. 관세 변경에는 별도의 입법이나 행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며, 의회는 세출과 부채한도 협상, 연준 인사 인준과 감독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6 : 3

IEEPA 관세 권한 부정.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232조·301조 관세는 이 판결의 무효화 대상이 아니다

12.5%

한국산 대상 품목의 관세 기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의 적용 기준으로 MFN 관세를 반영하며, 품목별 예외가 있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추가로 12.5%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3,500억 달러

한미 합의상 대미 투자 약정.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실제 투자 집행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41.1조 달러

미국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 현재 부채 잔액이 아닌 법정 한도다. 한도 인상·유예는 의회와 행정부의 주요 협상 사안이다

정책 향방 판단

지속 — 관세와 투자 압박 232조 반도체 관세 · H200 수출 허용 조건 · 301조 관세 · 대미 투자 약정 232조 반도체 관세, H200 수출 허용 조건, 301조 관세는 기존 법률에 따른 행정부 조치로, 개별 시행에 의회의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중간선거만으로 통상 기조가 바뀌기는 어렵고, 2028년 대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도 관세 협상과 연결돼 있다. 투자 철회나 이행 차질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기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투자 약정의 이행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상 — 세출·부채한도·연준 세출·추가 감세 조건 · IRA·CHIPS 집행 방어 · 연준 인준·감독 · 부채한도 협상 민주당은 세입·세출·예산위원회를 통해 추가 감세와 재정 조치의 조건을 협상하고, IRA 세액공제와 CHIPS 보조금의 축소를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법제화된 감세 조항을 바꾸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연준 인사 인준과 감독을 통해 독립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되면 미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남아 있다. IEEPA 관세의 무효화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곧바로 통상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01조·232조에 따른 관세 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것은 관세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품목별 세율과 면제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미정 — 추가 301조 조치 301조 과잉생산 조사(16개 경제권) ·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 15% 상한 보장 여부 USTR의 16개 경제권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조치가 구체화되면, 한국산 제품의 적용 대상과 기존 관세의 중복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한미 합의의 15%가 모든 품목의 최종 상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의 수출 채산성이 낮아지거나, 미국 고객과 가격을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배터리: IRA·AMPC의 추가 축소를 의회가 견제할 가능성. 다만 45X 공급망·외국기업 관련 제한은 별도 확인 필요 · 반도체: CHIPS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의회 감독, 관세 면제 대상인 미국 데이터센터용 공급 기회 · 금융: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의회 견제 ·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 사업과 연계한 수주 기회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한미 합의의 15%를 넘는 품목별 관세 부담 가능성 · 추가 301조 조치의 적용 범위와 중복 부과 여부 · 대미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과 국내 투자 여력 감소 가능성 · 부채한도 협상 교착 시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 대중국 기술 통제에 따른 수출허가·최종사용자 확인 부담

대미 수출·투자 기업의 점검 과제 — 어느 기업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미국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제조사(반도체·배터리·장비·자동차 부품·조선)	품목별 관세율과 301조·232조의 중첩 여부, 원산지·면제 조건,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DDP·DAP), 미국 고객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비한 원가 계산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미정) · 232조 반도체 2단계
미국에 생산시설이나 투자 약정이 있는 기업(배터리·반도체·조선·에너지)	CHIPS 보조금·45X 세액공제의 지급 조건과 지연 가능성, 대미 투자 약정의 이행 조건과 철회 시 불이익, 달러 차입 금리	세출 협상 · 대미 전략투자 사업 선정
달러 매출이나 달러 부채가 큰 기업(업종 불문)	환율·금리 변동이 매출·원가·외화부채에 미치는 영향, 차환 일정, 헤지 계약 조건	부채한도 협상(41.1조 달러) · 연준 인사
중국과 거래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쓰는 기업	대중국 기술 통제에 따른 수출허가·최종사용자 확인 의무, 미국 고객의 공급망 증빙 요구	H200 등 수출통제 · 커버드 리스트 확대

다섯 분야의 핵심 전망과 산업 영향

각 분야의 주요 전망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살펴본다. 세부 근거는 분야별 리포트에 제시했다.

3-1 미디어·방송·플랫폼

방송 면허 취소 위험은 낮아졌지만 관련 조사와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사 소유규제는 법원의 판단이 주요 변수이며, 플랫폼에서는 주법과 설계 책임 소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9.6%

TV 시청 시간 중 스트리밍 비중. 닐슨, 2026년 8월 기준. 지상파 17.5%, 케이블 18.9%, 유튜브 단독 15.8%

116억 달러

2026년 선거 주기 정치광고 지출 전망. AdImpact 전망. 지상파 56억 달러(48%), CTV 27억 달러(23%)

1,100억 달러

파라마운트–WBD 거래 규모. 10월 6일 거래 종결. CBS·CNN·HBO가 같은 기업집단에 편입

좌초

추진 제약 · 새 입법이 필요한 정책

AI 주법의 연방법 우선 적용 · 아동안전법 일괄 처리 · 230조 개정·해석 변경 · 공영방송 지원 중단의 영구화 주 AI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려면 명확한 연방법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하원이 이를 입법할 가능성은 낮다. 행정부가 기존 권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도 법적 쟁점이다.

아동안전법은 별도로 추진될 수 있다. 하원은 6월 29일 보호 의무 조항을 제외한 KIDS법을 통과시켰고, 상원 상무위원회는 8월 5일 주의의무 조항을 유지한 KOSA 원안을 가결했다. 레임덕 회기에는 주법 적용 배제와 묶기보다 아동안전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영방송 지원도 CPB 해산과 향후 연방 재원 배정을 구분해야 한다. 지원액은 매년 세출 협상의 대상이다.

약화

추진 부담 증가 · 재량 조치에 대한 의회 감독

ABC 면허 심사 · 합병 심사 개입 의혹 · 정당 정치광고 최저단가(LUC) · FCC 인사 FCC 미디어국이 4월 28일 ABC 직영 8개 방송국에 내린 조기 재허가 명령은 디즈니의 수정헌법 제1조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다. 면허 관련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의회도 결정 경위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의 WBD 인수 포기 과정에서 백악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공동모금위원회에 대한 LUC 확대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FCC 심사와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 선거 다음 날 주요 미디어 기업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정치적 개입 위험의 완화 기대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지속

기존 결정과 행정부의 정책 추진

39% 소유 상한 폐지 · 뉴스 왜곡 조사 · 영화 관세 · 위원 해임권 FCC는 39% 소유 상한 폐지를 의결했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핵심은 2004년 세출법에 규정된 상한을 FCC가 폐지할 권한이 있는지다.

넥스타-테그나 역시 FCC 승인을 받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으로 분리 운영 중이며, 배심 재판은 2027년 7월로 예정돼 있다. 기업은 규제기관의 승인뿐 아니라 집행정지와 후속 재판이 거래 종결·통합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부상

추진 가능성 확대 · 감독과 초당적 입법

감독 청문회 · KOSA·COPPA 2.0 · NO FAKES·학습데이터 공개 · 공영방송 긴급경보 · CTV 정치광고 투명성 새 의회 출범 초기에는 감독 청문회가 주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아동안전과 AI 관련 권리 보호는 초당적 지지가 있어 다른 쟁점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안별 합의 수준은 다르다. 소유 상한 복원, 지역 저널리즘 지원, 망중립성, 반독점 강화는 단기 입법보다 차기 정치 일정까지 이어질 의제로 본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방송국 면허 취소 위험 완화 · 합병 심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견제 · 주법에 따른 할리우드 권리자의 AI 협상력 유지·강화 가능성 · CTV와 지상파 간 정치광고 규제 차이 축소 가능성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소송·조사에 따른 지역방송 통합 지연 · LUC 확대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정치광고 물량 증가에도 단가 제약 가능성 · 공영방송 연방 재원 복원의 어려움 · 연방법과 사업 대상 주의 법률·판결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 플랫폼의 준수 부담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이 분야에서는 규제기관의 결정에 의회 감독과 사법심사가 뒤따르는 양상이 뚜렷하다. 소유 상한 폐지는 통신의 USF·주파수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법적 권한 범위가 중요하다. 다만 법률의 효력 연장이 필요한 CISA 2015 일몰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 플랫폼 설계 책임 소송은 AI 소비자 서비스의 안전 책임과 연결되며, NO FAKES는 AI로 생성한 음성·초상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인접 쟁점을 다룬다.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 미디어·방송·플랫폼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미국 구매자에 작품을 공급하는 대형 제작사·스튜디오	구매자 통합(파라마운트-WBD, NBCU 분사)에 따른 발주 창구와 결정권자 변화, 계약의 해지·권리 회수·대금 조건, 상위 고객 집중도	합병 심사·소송 일정 · 2027년 비선거해 광고 감소
미국 이용자를 둔 국내 플랫폼(웹툰·게임·팬 플랫폼·OTT)	사업 대상 주의 아동안전·프라이버시법, 설계 책임 소송 동향에 따른 연령 확인·추천·광고 설계, 신고·삭제 절차	주법 체제 지속 · KOSA·COPPA 2.0 처리 여부
해외 플랫폼의 외주 제작·더빙·VFX·후반작업 업체	플랫폼의 발주 변동과 단가 조정, 계약서의 AI 이용 조건(학습·더빙·재사용) 명시 여부	구매자 통합 · NO FAKES 성립 여부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중소)·방송사	미국 변수의 직접 영향은 작다. 플랫폼 계약서의 AI 조항과 권리 귀속을 확인하고, 미국의 소유규제·정치광고 사례는 통합미디어법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통합미디어법 논의(국회 TF·방미통위)

3-2 네트워크 통신

통신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존 법률과 FCC 결정에 근거하고 있어 선거 직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2027년의 주요 변수는 스페이스X의 이동통신 진출이다. 민주당 의회는 승인 경위와 조건을 조사할 수 있지만, 실제 경쟁 구도는 주파수 확보와 서비스 허가, 지상망·위성 구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42.0 %	160 MHz	−13.3 %	482 MHz
2026년 4분기 USF 기여율. 2분기 37.0%, 3분기 38.8%에서 상승. 모든 통신 매출에 적용되는 비율은 아님	상부 C밴드 재배치 규모. FCC가 7월 22일 의결. 법률상 2027년 7월 4일까지 경매해야 하는 최소 물량과는 구분	10월 9일 T모바일 주가 하락률. 같은 날 AT&T −9.8%, 버라이즌 −8.7%. 3사 시가총액 약 500억 달러 감소	SCS 대상 대역 5개에서 13개로 확대. 10월 29일 규칙 제정안 공고 (NPRM). 대상 대역 확대와 임차 요건 폐지는 최종 확정 전

좌초 주정부 권한과 법정 재원 배분의 변경

주 광대역 요금규제의 연방 선점 · 디지털형평성법 예산 삭감 · BEAD 잔액 국고 환수 주정부의 광대역 요금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무력화하거나, 디지털형평성법 예산 27.5억 달러를 영구 삭감하고, BEAD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은 법률·예산·소송의 제약을 받는다. 뉴욕의 저소득층 대상 월 15달러 광대역 요금제는 관련 소송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디지털형평성법 예산 취소는 의회의 반대와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BEAD는 법률에 주별 재원 배분 근거가 있다. 행정부가 기존 권한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다.

약화 지원금 조건과 FCC 재량 조치

BEAD 조건의 주 AI 규제 연계 · 합병 승인 DEI 조건 · 캘리포니아 COLR 연방 개입 · 라이프라인 자격 축소 · FCC 인사 BEAD 미집행 자금을 주 AI 규제와 연계하는 조치, 합병 승인의 DEI 관련 조건, 캘리포니아의 통신서비스 유지 의무(COLR)에 대한 연방 개입은 의회 감독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이프라인 자격 축소와 FCC 인사 재편도 정치적 협상에 영향을 받는다. 행정명령 14365호에 따른 BEAD 조건은 법적 근거를 둘러싼 다툼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스페이스X의 그레인 주파수 면허 인수와 에코스타 후속 거래에서는 승인 조건과 심사 경위가 주요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COLR 문제 역시 FCC의 권한과 주정부의 서비스 유지 권한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지속 광대역 투자·주파수 공급·위성통신 확대

BEAD 기술중립 재편 · 주파수 경매 확대 · 위성 D2D · 대중국 공급망 규제 · 망중립성 규칙 부재 BEAD의 기술중립적 사업 재편, 주파수 경매 확대, 위성-휴대전화 직접 연결(D2D), 대중국 통신 공급망 규제는 선거만으로 방향이 바뀌기 어렵다. 연방 망중립성 규칙이 무효화된 상태도 의회 다수당 교체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BEAD: 광섬유뿐 아니라 고정무선·저궤도 위성도 활용하는 방향이다. 기업의 수주 전망은 주별 기술 선택과 계약·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계획 승인을 실제 발주나 공사 착수와 구분해야 한다. **주파수:** OBBB에 따른 공급 확대와 FCC 경매 권한 연장으로 추가 경매가 추진된다. 다만 경매 대상 확정부터 주파수 확보·재배치·망 구축까지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위성 D2D:** 스페이스X의 주파수 거래와 위성 승인, 지상망 계획이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 승인된 위성 수가 실제 운용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개시와 단말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망·규제 완화:** 중국산 장비·부품과 시험기관에 대한 제한은 공급업체 선정과 인증 비용에 영향을 준다. 망중립성 규칙 무효화 이후의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상

USF 개편과 통신 인허가 개선

FCC·NTIA 감독 · USF 재원 개편 · 통신 인허가 개선 · 디지털형평성법·라이프라인 방어 · 주 요금규제 권한 민주당 의회의 주요 과제는 FCC·NTIA 감독, 보편서비스기금(USF) 재원 개편, 통신 인허가 개선, 디지털형평성법·라이프라인 지원 방어다. 주정부의 저소득층 요금규제 권한도 주요 쟁점이다. USF 기여율은 2026년 4분기 42%에 도달했다. 기여 대상인 주간·국제 통신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매출 기반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빅테크 등으로 분담 대상을 넓히자는 논의가 커지고 있지만, 대상 기업과 산정 방식, 법적 근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 전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도 후속 입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통신 사이버보안·복원력법, 통신기술 투명성법, 위성·통신 간소화법이 대표적이다. 각각 보안 평가, 규제 대상 기업의 등재·허가 절차, 위성 인허가 개선을 다룬다. 현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새 의회에서 재발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상징적

대규모 지원 복원과 규제 입법

ACP 전면 복원 · 망중립성 법제화 · FCC 위원 신분 보호 · 스타링크 승인·보조금 제한 저소득층 인터넷 요금 지원 프로그램(ACP)의 전면 복원, 망중립성 법제화, FCC 위원 신분 보호, 스타링크 승인·보조금 제한은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의제다. 다만 새 입법에는 상원의 토론 종결과 대통령 거부권 등 높은 장벽이 있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기존 이동통신사: 신규 경쟁자의 승인 조건과 절차에 대한 감독 강화 가능성 · 타워·장비업체: BEAD 발주, C밴드 구축, 신규 지상망 투자에 따른 수요 · 농촌 통신사: USF 재원 안정화와 저소득층 지원 유지 가능성 · 비중국 장비·시험인증 업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사업 기회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기존 이동통신사: 위성·지상망 결합 서비스와의 경쟁, 주파수 경매 지출 · 케이블: 저소득층 요금규제 확산과 CBRS 정책 변경 가능성 · 스페이스X: 거래 심사·의회 조사와 구축 조건에 따른 일정 지연 · 빅테크: USF 분담 대상 확대 시 추가 비용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USF 개편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분담, 콘텐츠 분야의 망 이용대가 논쟁과 연결된다(04장 ④). 공통 쟁점은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기반시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다. 대중국 통신 공급망 규제는 사이버보안의 통신망 보호, AI 분야의 반도체 수출통제와도 맞닿아 있다(04장 ⑤). 스페이스X의 사업 확대는 위성·지상 통신망의 경쟁뿐 아니라 관련 장비 수요와 기업 간 거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04장 ②).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 네트워크 통신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통신 장비·부품·광섬유 제조업체(미국 수출)	미국 고객·BEAD 수주 건별 부품 원산지, 공급업체 지분·통제 구조, 중국 소재 시험소 이용 여부, BEAD 주별 기술 선택과 발주 시점(계획 승인·발주·착공 구분)	커버드 리스트 확대 · 시험소 배제 2028. 12. · C밴드 경매 2027. 7.
시험인증기관·단말 제조사	FCC 인증의 공급망 요건, 중국 소재 시험소 배제에 따른 시험 경로 변경	통신기술 투명성법 처리 여부
위성·D2D 관련 부품·안테나·단말 기업	SCS 규칙 확정 범위, 스페이스X의 지상망·위성 투자에 따른 수요, 승인된 위성 수와 실제 운용 규모의 차이	SCS 최종 규칙 · 그레인·에코스타 거래 승인
국내 통신사업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내 D2D 모델 검토 시 미국·일본의 승인 조건과 제휴 구조를 비교 사례로 활용하고, USF 기여 기반 논의는 보편역무 재원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USF 개편 입법 · 미국 3사 합작사·일본 3사 D2D

3-3 AI·AX·데이터센터·반도체

AI 인프라의 확장 속도는 전력 확보, 메모리 공급,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AX 도입에는 데이터 품질과 업무 적용 성과도 중요하다. 선거 이후에는 주정부의 건설 제한과 의회 감독이 투자 일정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 기업에는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반도체·전력기기 발주, 공급 가격을 통해 영향이 전달될 전망이다.

7,300 억 달러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투자 계획 합산(참고치). 아마존 2,200 · 알파벳 2,000 · 마이크로소프트 1,700 · 메타 1,400. 회계연도와 리스 포함 여부가 달라 합계보다 기업별 수치로 볼 것

40 /41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가운데 반대 결과가 나온 건수(10개 주). 지역 인허가 단계의 저항이 투자 일정의 변수임을 보여 준다

49.8 GW

텍사스 ERCOT의 신규 접속 중단(8. 3.)으로 지연 위험에 놓인 용량(BNEF). 12월 전력망 감사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정해진다

8.70→50 달러

DDR5 16Gb 고정거래가(2025. 10.→2026. 10.). 범용 D램 가격이며 HBM 수급과는 구분해서 볼 것

정책 판정 — 좌초 2 · 지속 3 · 미정 3 · 부상 4

좌초 연방 AI 주법 선점 입법 · 포괄적 연방 AI 규제법 연방 AI 주법 선점 입법(법무부 소송팀 1월 가동, 3. 20.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가 입법을 권고했으나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과 포괄적 연방

AI 규제법(민주당 의회도 60표와 거부권을 넘기 어렵다)은 이 보고서의 전망 기간인 2028년까지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지속 AI 행동계획·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EO 14318) · 제네시스 미션(EO 14363) · 232조·301조 관세 AI 행동계획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EO 14318, 100MW 이상 NEPA 간소화·연방 부지 제공), 제네시스 미션(EO 14363, 예산 규모는 세출 협상에 달려 있다), 232조·301조 관세는 행정부 권한에 근거해 유지된다. 관세는 품목별 세율과 면제 조건이 칩 공급 비용과 미국 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산업적 의미다(법적 근거의 변화는 02장).

부상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보호법 · 빅테크 감독 청문 · 프론티어 AI 독립 안전검사 · AI 책임·최소 안전기준 프레임워크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 9월 하원 초당 통과, 상원 미정; 슈머 차기 원내대표가 우선순위로 지목), 빅테크 감독 청문(마키가 대규모 소환을 공언했고, OpenAI·Anthropic·메타·구글·스페이스X를 집중 조사한다), 프론티어 AI 독립 안전검사 입법(트라한 — 선도 모델을 외부 전문가가 안전 기준에 따라 평가), AI 책임·최소 안전기준 프레임워크(제이콥스·바이어 — 검사에 불합격한 모델의 가동을 중단시킬 권한을 포함, 초당 AI LEAD Act와 접점). 로이터(11. 6.)는 이들을 "1월에 쏟아질 법안"으로 전했다. 전기요금 보호는 초당적 협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종 입법에는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 연방 AI 규제가 성립할 때까지 2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를 금지하는 법안(샌더스·오카시오코르테스)과 빅테크–전력회사 계약 조사(워런)도 추진되지만, 전자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입법에 가깝다.

주 정부 변수 주정부의 건설 제한 논의는 연방 입법과 별개로 투자 일정에 영향을 주며, 시행 중인 조치와 당선인 공약은 구분해 봐야 한다. 텍사스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9월 21일 12월 전력망 감사 때까지 주 허가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노호사 당선인이 "전력·수자원·지역 보호 입법 전까지 신규 승인 중단"을 공약했고(제퍼리스는 13.3GW가 위험하다고 봤다), 조지아(보텀스, 주 전체 일시 중단 검토), 오하이오(액턴, 조건부 모라토리엄과 2027년 건설 금지 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 추진), 네바다·미시간 당선인도 세제 혜택 폐지와 전력·수자원 규제를 내걸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주가 미국 계획 용량의 45%(텍사스 25%)를 차지한다고 추산하면서도, 정치적 압력이 풀리면 중단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정 대중국 AI 칩 수출(H200) · 301조 과잉생산 관세 · 232조 반도체 2단계 대중국 AI 칩 수출(행정부는 H200 수출을 관련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용했고, 의회에는 30개월 금지를 담은 SAFE Chips 법안이 계류 중이다), 301조 과잉생산 조사(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 결과 미발표 — 한미 공동 팩트시트(2025. 11.)의 15%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특정 관세에만 해당하며, 301조 조치까지 합산한 상한은 문서에 없다), 232조 반도체 2단계 관세와 상쇄 프로그램(범위와 시점 미공표).

산업별 수요와 도입 여건

수요 확대 AI 메모리·반도체와 클라우드는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는다. 다만 장기 공급계약은 제품별 물량과 인도 일정, 최소 구매 의무를 구분해 봐야 한다.

투자·비용 제약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인허가, 소비자 디바이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부담이다. 소비자 AI 서비스는 안전·개인정보 관련 소송과 규제 준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도입 성과 확인 금융·보험과 중소기업·제조업의 AI 활용은 사용률뿐 아니라 처리시간, 오류율, 총비용의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입률만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정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한국 메모리 업체: AI 서버용 수요와 장기 공급 기회, 요건 충족 시 관세 면제 · 전력기기·에너지: 자가발전·송배전·냉각 설비 수요 · 클라우드·AX 기업: 업무별 비용 절감과 생산성 개선 수요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주요 AI 고객에 대한 매출 집중 · 고객사의 투자 조정과 데이터센터 완공 지연에 따른 출하 이연 · 추가 관세와 면제 요건 변경 · 디바이스·제조기업의 메모리 원가 상승 · 국내외 전력망 접속 지연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데이터센터 전력 병목은 통신의 허가 개선 입법, 해저케이블·장거리 광섬유 수요, 사이버의 기반시설 보안(외국산 전력 설비 규제 비상사태)과 하나의 축(04장 ①)을 이룬다. AI 주법 선점의 좌초는 미디어(플랫폼)·사이버(주 AI·보안법) 판정과 같은 사안이고, 관세의 법적 근거가 바뀐 것은 거시·통상 분야의 핵심이다.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 AI·AX·데이터센터·반도체 (미국 노출 유형별)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미국에 반도체·장비·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고객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단계(전력 접속·건설·가동)별 발주 전망, 장기 계약의 인도 연기·해지·가격 조정 조항, 232조 관세의 용도 면제 증빙과 수출통제 조건	주 인허가 동향 ·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계획 변경 여부(발표 일정은 06장)
미국 데이터센터·전력 설비에 공급하는 기업 (변압기·ESS·케이블·냉각)	주별 건설 제한·전력망 접속 지연에 따른 수주 지연, 전기요금 보호법 성립 시 발주 조건 변화	텍사스 주 의회 회기 · ERCOT 접속 재개 여부(일정은 06장)
미국 클라우드·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AX 추진 기업)	데이터 이전·보관 조건, 투자 지연에 따른 서비스 가격·용량 변동, 책임 조항과 AI 책임 입법 동향	AI 책임 프레임워크 법안 · 전기요금 보호법
미국에 AI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미국 이용자를 둔 기업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 AI법의 투명성·안전 의무, 연방 입법 동향, 제품 책임 소송 위험	주 AI법 존속(선점 좌초) · 독립 안전검사 법안

3-4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정보공유와 정보수집 권한의 연장이 주요 협상 사안이다. CISA 2015는 레임덕 의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 의회의 과제가 달라진다. FISA 702는 법률상 수권 만료와 기존 법원 인증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속 협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프론티어 AI의 보안 평가와 사고 보고도 초당적 입법이 논의될 분야다.

12. 11.

CISA 2015 임시 연장 만료일. 위협정보 공유법의 장기 연장 여부가 쟁점. 하원 NDAA에는 2035년까지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상원안과 조율 필요

2027. 3.

FISA 702 기존 법원 인증 만료 시점. 수권 법률은 6월 12일 만료. 이후 활동은 기존 인증의 효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900 명

CISA 인력 감소 규모. 약 3,300명에서 2,400명으로 감소. FY2027 예산안의 추가 감축 제안과는 구분

200 곳+

Salt Typhoon 침해 대상 사업자.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침해 대응과 고객정보 보호가 주요 감독 쟁점

좌초

행정부·공화당이 선호한 조건의 입법 추진

'검열 금지' 조건부 CISA 2015 연장 · 개혁 없는 FISA 702 연장 · 주 AI법의 포괄적 적용 배제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장기 연장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CISA 2015가 레임덕 회기에서 장기 연장되면 새 의회의 협상 여지는 줄어든다. FISA 702 후속 입법에서는 영장 요건과 감독 장치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주 AI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연방 입법도 민주당 하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약화

추가 감축과 지원 철수

CISA 인력·예산 감축 · 선거보안 지원 축소 · 지휘부 공백 민주당 의회는 CISA의 추가 감축을 견제하고 선거보안 지원 복원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의회의 반대가 곧 예산·인력 복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수준은 세출 협상에 달려 있다. 국장 공백 해소 역시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상원의 인준이 모두 필요하다.

지속

규제 간소화와 행정부 중심의 대응

공세적 사이버 전략 · CIRCIA·CMMC 개편 · FCC의 특정 보안 의무 철회 · 프론티어 AI 자율 협약 · SIF 공세적 사이버 전략과 규제 간소화는 행정부 주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민간의 대응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 침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CIRCIA의 사고 보고 범위와 절차는 최종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CMMC 2단계 추진이 중단됐더라도 DFARS 등 기존 계약상 보안 의무는 유지된다. FCC가 CALEA 해석을 통해 부과했던 특정 사이버보안 의무의 철회도 통신사의 모든 보안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프론티어 AI

자율 협약과 Super Intelligence Force(SIF)의 검토도 계속된다. 2027년 2월로 예정된 작업 종료 후에는 권고 내용이 예산·조달·보고 의무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상

기관 감독과 법률 연장, AI 보안 대응

DHS·CISA·정보기관 감독 · 정보공유법 장기 연장 · 보안 예산 복원 · FISA 702 개혁 · 프론티어 AI 대응 민주당은 인력 감축과 사고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보공유법 연장과 CISA·선거보안 예산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FISA 702에서는 정보수집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다. 프론티어 AI의 취약점 발견·공격 능력은 새로운 감독 의제다. AI 사고와 취약점 보고, 보안 평가 등은 국가안보를 공통 관심사로 삼아 초당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서한, 법안 제출, NDAA 반영, 최종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상징적

포괄적 규제와 기존 제도의 전면 복원

연방 프라이버시법 · 통신 보안 의무 법제화 · CIRCIA·CMMC의 기존 추진안 복원 포괄적 연방 프라이버시법은 주법과의 관계 등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 통신 보안 의무의 법제화와 CIRCIA·CMMC의 전면 복원 역시 정치적·절차적 제약이 크다. 기업은 새 연방법의 성립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주법과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보안업체: AI 취약점 탐지·패치와 사고 대응 수요, 정보공유법 연장 시 법적 안정성 개선 · 통신사: 특정 규제에 따른 준수 부담 완화와 자율 인증 논의 · 방산업체: CMMC 2단계 일정 부담 완화, 기존 계약 의무는 유지 · 금융: 보고 절차 정비 시 중복 업무 감소 가능성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통신사: 침해 경위와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 클라우드·플랫폼: 주별 개인정보 의무와 정보수집 협조 요청의 법적 근거 확인 · 프론티어 AI 기업: 안전평가·사고 보고 의무 확대 가능성 · 기반시설 운영기업: 지속적인 침해 위협과 운영기술(OT) 보안 인력 부족 · 보안업체: 공공 예산 축소와 발주 지연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정보공유·정보수집 권한의 연장은 안보상 필요와 개인정보 보호 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사안이다(핵심 판단 ②). 통신망 침해와 공급망 규제는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 프론티어 AI 평가·보고는 AI 분야에 직접 연결된다. 연방법이 주법을 어느 범위까지 대체할지도 미디어·콘텐츠의 아동안전·AI 권리 입법과 공통된 쟁점이다.

쿠팡 사례(과징금 6. 11., 유출 4,235억 원과 무단수집 2,011억 원 합계 약 6,246억 원; 301조 청원 1월 제기·3. 9. 철회, 미 하원 법사위 보좌진 중간보고서 7. 1.)는 국내 개인정보 집행이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측의 차별 주장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11월 5~6일 무단수집 과징금은 전부, 유출 건은 시정명령만 집행정지한 것처럼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도 각각 다르므로, 기업은 제재의 법적 근거와 절차, 소송 진행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미국 사업 유형별)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미국 자회사나 이용자를 둔 기업	사업 대상 주의 개인정보법, 침해사고 보고 의무, 위협정보 공유의 면책 요건을 확인한다	CISA 2015 연장 여부, 주법 시행·개정
미국 국방·공공 조달 참여기업	DFARS 등 계약상 보안 의무, 조달별 장비·부품 제한과 인증 요건을 점검한다	NDAA, CMMC 후속 일정, 계약 조건 변경
미국에 보안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공공 예산 의존도와 발주 일정을 확인하고, 고객 계약·보험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점검한다	FY2027 확정 예산·발주, SIF 권고의 후속 조치
개인정보 집행 대상인 국내 플랫폼·커머스 기업	국내 조사·제재와 해외 자료 요구에 일관되게 대응할 사실관계, 준법·절차 기록을 정리한다	국내 소송, 미국 의회·통상 당국의 공식 조치

3-5 콘텐츠·IP

콘텐츠 분야의 주요 쟁점은 AI에 의한 음성·초상 복제와 학습데이터 이용,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다. 민주당 의회에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 입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해외 디지털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보는 USTR의 기조는 의회 다수당 교체만으로 달라지기 어렵다.

791 억 달러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 세계 7위. 연간 수출 136억 달러 이상

7,050 억 원

2026년 문체부·콘진원 지원 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 R&D·해외 진출 지원 확대

4 개 사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스카이댄스. 대형 구매자에 대한 매출 집중과 계약상 협상력은 선거와 별도로 관리할 과제

부상

AI 복제물의 권리 보호와 학습데이터 공개

NO FAKES Act · CLEAR Act · 주별 딥페이크·음성복제법 NO FAKES Act of 2026(S.4591·H.R.8915)은 개인의 음성·외형을 재현한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 연방 차원의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신고·삭제 절차 등을 규정한다. 사후 보호도 포함하지만, 보호 기간과 갱신에는 별도 요건이 있다. CLEAR Act(S.3813)는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 정보를 저작권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 모델을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저작물 요약과 공개 데이터세트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조직 내부의 상업적 사용도 포함한다. 다만 공개 의무가 곧 이용 허락이나 보상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별 딥페이크·음성복제법도 기업 대응의 기준으로 남는다. 다만 NO FAKES가 성립하면 일부 주법상 청구를 연방법이 대체할 수 있어, 연방 권리와 주법의 적용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두 법안 모두 입법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최종 보호 범위와 시행 시점은 확정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지속

망 이용대가와 플랫폼 규제의 통상 쟁점화

USTR 무역장벽 보고서 · 망 이용계약 공정화 입법 · 해외 플랫폼 규제 USTR은 한국과 EU의 망 이용대가 입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다뤄 왔다. 이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통상정책이므로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다. 한국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 입법도 국내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미국의 통상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빅테크의 USF 기여와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분담이 논의되는 반면, 해외의 비용 부과에는 통상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기업과 정책당국은 단순히 같은 비용 분담 요구라고 주장하기보다, 부과 대상·산정 기준·국적에 따른 차별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04장 ④). 연방 망중립성 규칙의 복원이나 포괄적인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를 이미 확정된 변화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현재 의무와 향후 입법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응 · 권리 확보와 판매처 다변화

한국에서는 AI 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기존 저작권·계약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범위, 디지털 복제물의 권리 보호는 계속 논의되는 사안이다. 미국의 권리 보호 입법과 한국의 콘텐츠 지원정책은 기업에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만, 어느 쪽도 개별 계약의 권리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제작사는 작품·음원·실연의 권리와 AI 이용 동의를 정리하고, 배우·가수의 음성·초상을 어떤 용도와 기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웹툰·소설을 영상·게임 등으로 확장할 때에도 매체별 권리와 AI 활용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통에서는 미국 대형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고 판매 지역과 경로를 넓혀야 한다. 플랫폼 간 제휴, 해외 판매처 확대, 직접 판매(D2C)는 사업별 수익성을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 AI 번역·더빙도 비용 절감뿐 아니라 품질 검수와 음성 이용 동의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산업 영향 · 기회 요인

원천 IP 보유기업: 권리 관계가 명확한 작품·음원·데이터의 라이선스 기회 · 엔터테인먼트 기업: NO FAKES 성립 시 적용 요건에 따른 미국 내 디지털 복제물 보호 강화 · 제작사: 적법한 이용 근거와 이력 관리에 따른 계약 협상력 · 유통기업: AI 번역·더빙을 활용한 현지화 비용 절감과 판매 지역 확대

산업 영향 · 부담 요인

미국 대형 구매자에 대한 매출 집중 · 무단 학습·음성·초상 이용에 따른 분쟁 · 망 이용대가 입법의 통상 부담 · TDM·공정이용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 미국의 주별 법률과 판결에 따른 대응 비용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NO FAKES와 학습데이터 공개는 미디어·AI 분야의 권리 보호 논의와 연결된다. 망 이용대가는 통신의 USF 개편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비용 분담을 다루지만, 법적 근거와 부과 방식은 다르다. 개인정보 집행을 둘러싼 통상 갈등까지 고려하면, 한국 기업은 저작권·개인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대응을 통상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05장).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의 점검 과제 — 콘텐츠·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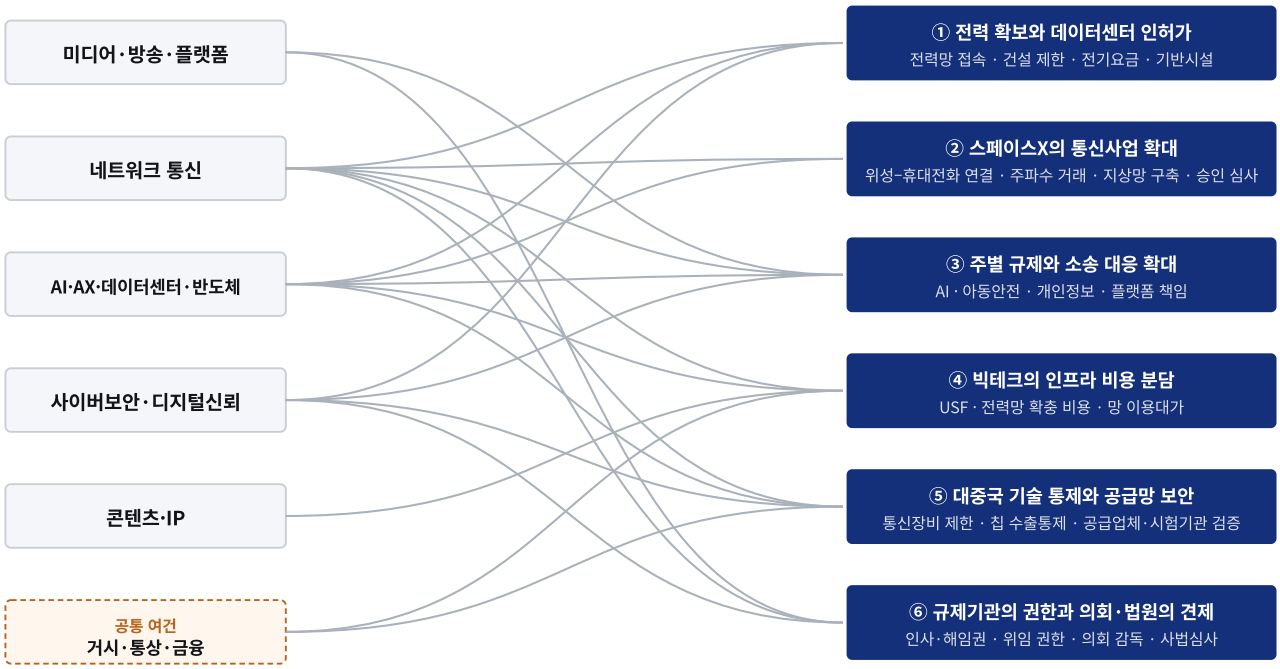
대상 기업	확인·점검할 사항	확인할 변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엔터·제작사	작품·음원·실연·초상·번역 권리를 정리하고, 디지털 복제물의 탐지·신고·삭제 절차를 마련한다	NO FAKES의 최종 보호 범위, 주법 적용·개정
미국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	AI 학습·생성·재사용의 허용 범위와 기간·지역을 확인하고, 독점 조건과 고객 집중도를 점검한다	구매자 통합, 계약 갱신·조건 변경
AI 도구를 활용하는 제작기업	도구 약관, 입력 자료의 이용 권한, 음성·초상 동의와 생성물의 권리 조건을 기록한다	도구 약관 변경, CLEAR Act 적용 대상·시행 요건
국내 플랫폼·OTT 사업자	망 이용계약과 비용 자료를 정리하고, 통상 쟁점에 대응할 부과 기준·비차별성 근거를 검토한다	USTR 보고서와 후속 조치, 국내 입법 동향

04 · 공통 쟁점

다섯 분야가 함께 주목해야 할 여섯 가지 변화

앞서 살펴본 다섯 분야에는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시장 변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각 변화가 여러 산업의 투자·비용·규제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그림 4. 산업별로 영향을 받는 여섯 가지 공통 쟁점



선은 각 분야와 직접 관련된 공통 쟁점을 나타낸다. 연결 수는 영향의 크기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① 전력 확보와 데이터센터 인허가 — 반도체·통신망·보안 수요에 함께 영향

빅테크 CapEx 7,300억 달러 · 텍사스 ERCOT 접속 중단(49.8GW) · 뉴욕 모라토리엄 · 40건 주민투표 반대 · 전기요금 보호법(하원 통과) · 허가 개선 입법(통신·초당) · 해저케이블 심사 단축·장거리 광섬유 수요 · 외국산 전력 설비 규제(EO 14421)·OT 보안 인력 공백 · 한국 대미 전략투자 첫 사업 = 텍사스 발전소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설비, 광통신망, 기반시설 보안 수요를 늘린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실제 발주로 이어지려면 전력망 접속과 지역 인허가를 확보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인허가를 간소화하더라도 주정부의 건설 제한과 주민 반대가 사업 일정을 늦출 수 있다. 의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을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통신망 구축 허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다.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충하되, 비용 부담과 지역사회 영향을 명확히 하려는 접근이다.

전력·통신망이 늘어나면 운영기술(OT) 보안의 중요성도 커진다. 기반시설 침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응 인력이 부족하면 설비 투자와 별도로 보안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는 변압기·케이블·냉각·발전설비의 공급 기회가 생긴다. 다만 투자 사업 선정이 곧 한국 업체의 수주를 뜻하지는 않는다. 고객의 전력 확보, 착공, 장비 발주 일정을 구분해 매출 전망에 반영해야 한다.

② 스페이스X의 통신사업 확대 — 승인 조건과 구축 속도가 경쟁 구도를 결정

에코스타 65 MHz(5. 12.) · D2D 위성 15,000기(10. 6.) · 그레인 800 MHz 대역 면허(10. 8.) · SCS 13개 대역 NPRM(10. 29.) · 퀄컴 5G 지상망(11. 5.) · 10. 9. 3사 시총 −500억 달러 · BEAD LEO 배정(뉴욕 25%, 7월 절반 축소 요구) · 머스크 기업 조사(하원 감독위 가르시아) · 블루 텍사스(주지사·상원 교체) · 테슬라-스페이스X 결합 · SpaceXAI 자율 협약 · 2028년 초 자체 주파수 서비스

스페이스X의 주파수 확보, 위성-휴대전화 직접 연결(D2D), 지상망 구축은 기존 이동통신사와 장비업체 모두에 중요한 변수다. 주파수 거래와 위성 승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서비스에는 추가 투자와 단말 지원,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 제안 역시 최종 확정된 조건과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회는 거래 승인 경위, 연방 계약과 보조금, 관계 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사업장이 있는 주정부의 세제·입지 정책도 투자 일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스페이스X·테슬라·AI 관련 사업은 각각 적용 법률과 계약이 다르므로, 공통 경영진만으로 모든 사업의 규제 위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수혜 여부도 정치적 압박의 강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경쟁력은 서비스 개시 시점, 통신 용량과 품질, 가격, 지원 단말에 달려 있다. 한국 기업은 위성·지상망의 장비 수요와 함께 거래 승인 조건이 발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③ 주별 규제와 소송 대응 확대 — 연방법과 사업 대상 주의 의무를 함께 확인

AI 주법 선점 좌초(미디어·AI·사이버 공통) · 캘리포니아·뉴욕·콜로라도 AI법 존속 · 20개 주 프라이버시법 시행·24개 주 제정 · 연방 아동안전법 미성립(KIDS 법 하원 통과, 상원 조정 미완) · 뉴욕 15달러 광대역법(대법원 상고 2회 불수리) · 매사추세츠·

버몬트·캘리포니아·미네소타 확산 · 뉴멕시코 3.75억 달러·로스앤젤레스 배심의 플랫폼 '설계 책임' · 주 법무장관 집행(메타, 주·준주·DC 법무장관 52명과 최대 185.9억 달러 합의)

포괄적인 연방 AI·프라이버시 입법이 지연되면서 주법과 주정부의 집행이 기업 대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AI 투명성, 아동안전, 개인정보, 저소득층 광대역 요금 등은 분야별로 서로 다른 주법이 적용된다. 행정부가 주 AI법의 적용을 제한하려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남는다. 반면 NO FAKES처럼 특정 분야의 연방법이 성립하면 일부 주법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법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거나 연방법으로 일괄 통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설계 책임 소송과 주 법무장관의 집행도 중요하다. 개별 배심 평결이 곧 전국 공통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 소송과 기업의 설계·운영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연방법 준수와 함께 사업 대상 주, 이용자 유형, 취급 정보에 따라 의무를 정리해야 한다. 미국 내 주별 규제 사례는 통상 협상의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한국 제도의 비차별성과 적정성을 설명할 근거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

---

④ 빅테크의 인프라 비용 분담 — 미국 내 논의와 해외 통상정책 사이의 차이

USF 기여율 42% · 빅테크·광대역 기여 법안(USTelecom 1순위, 카 위원장·민주당 수렴) ·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보호법(하원 통과) · 빅테크 감독 청문·반독점(상징적) ·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EU 망 이용대가 = '디지털 무역장벽' · 쿠팡 과징금 6,246억 원 = '미국 기업 차별' 주장, 301조 청원(철회)·FTA 중재

USF 재원 개편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논의의 공통 질문은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기반시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통신에서는 기여 대상 확대가, 전력에서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쟁점이다. 반면 USTR은 한국과 EU의 망 이용대가 입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다뤄 왔다. 미국 내 비용 분담 논의와 해외 규제에 대한 통상 압력이 병존하는 셈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각 제도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달라 이러한 차이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AI 학습데이터 공개와 창작자 보상은 관련 논의이지만, 통신·전력 인프라 비용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자동으로 보상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다뤄야 한다. 한국의 대응은 "미국도 비용을 부과한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용 발생의 근거, 부과 대상의 선정 기준,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재 역시 인프라 비용 분담과 구분해 집행의 근거와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⑤ 대중국 기술 통제와 공급망 보안 — 시장 진입 기회와 검증 부담이 함께 확대

커버드 리스트 부품 단위 확대·외국산 라우터 등재·전력 인버터·로봇 등재 · 중국 소재 시험소 배제(609개 중 25.1%, 2028. 12. 기한)·중국의 보복 명단 · 해저케이블 '거부 추정'·SLTE 면허 · H200 수출 허용 vs SAFE Chips 법안 · Salt Typhoon 침해 사례(200곳+)·크루즈-워너 법안 · 팰런-거스리 통신 투명성법(등재 절차·계열사 허가 제한) · 한국 장비·부품·시험인증의 반사이익과 증빙 부담

통신장비 제한, 반도체 수출통제, 기반시설 보안은 대중국 정책에서 양당의 공통 관심사다. 선거 이후에도 기본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제 대상과 예외, 허가 조건, 집행 방식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AI 칩의 대중국 수출 허용과 이를 제한하려는 의회 법안이 대표적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232조 관세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통제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기업은 거래 방향과 적용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는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거나 시험인증·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배제가 한국 업체의 수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격·성능과 함께 부품 원산지, 공급업체의 지분·통제 구조, 시험인증과 보안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해저케이블, 오픈RAN, 무선주파수(RF) 부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서는 공급망의 투명성이 입찰·인증·계약 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⑥ 규제기관의 권한과 의회·법원의 견제 — 정책 방향만큼 법적 근거와 절차가 중요

Trump v. Slaughter(6. 29., Humphrey's Executor 폐기) · FCC 3인 체제·3 대 1 인준 시도 · CISA 국장 공석 · 사무국 단위 결정(넥스타-테그나, LUC, ABC 재허가, 동등기회) · 사안별 재량(39% 상한 폐지, 합병 DEI 조건) · GAO '규칙' 판정(BEAD 재구조화) · 감독 청문회·기록 요구(모든 분야 '부상 ①') · 시한부 법률의 조건 설정권(CISA 2015, FISA 702, NDAA, 세출) · 2027년 사법 일정(디즈니 v. FCC, 상한 집행정지, 넥스타 배심, LUC 본안, DEA 소송, EO 14365, COLR 선점)

규제기관의 인사·해임권, 개별 정책의 위임 근거, 의사결정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Trump v. Slaughter 판결이 독립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주더라도, 각 기관의 정책이 적법한지는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CISA의 국장 공백도 독립위원의 해임 보호와는 다른 문제다. 법원이 규칙을 취소한 이유에 따라서도 후속 대응이 달라진다. 망중립성 규칙은 FCC의 법률상 권한 해석이, 클릭 해지 규칙은 규제분석 등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다. 권한 부족은 입법이나 법 해석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절차상 하자는 절차를 보완해 다시 추진할 여지가 있다. 방송사 소유 상한 폐지 역시 의회가 정한 제한을 FCC가 변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위원회 의결과 위임받은 부서의 결정은 절차가 다르지만, 모두 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요구를 통해 결정 경위와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다. 확보된 기록은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기업은 의회 조사, 규제기관의 재검토,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을 구분하고 각 단계가 승인·투자·계약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

05 ·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

산업별 기회·부담과 정책 과제

한국의 반도체·전력기기·통신장비 산업은 미국 AI 인프라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고객사의 투자 확대는 수출 기회지만,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전력 확보가 지연되면 장비 발주와 반도체 출하도 늦어질 수 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수록 고객사의 영업현금흐름과 보유 현금, 자금조달 여건도 중요해진다. 선거 직후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은 이러한 투자 전망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기업의 대응은 주가 움직임보다 고객별 매출 비중,

확정 발주, 계약 조건과 대금 회수 일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영향을 한국 산업별로 정리하고, 정책 과제를 열 가지로 제시한다.

경영회의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다섯 가지

분야별 대응을 검토할 때는 다음 질문을 공통 기준으로 삼는다. ① 이미 시행 중인 의무인가, 아직 제안·심사 단계인가? ②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계약상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가? ③ 매출·원가·투자 지출·대금 회수 중 어디에 먼저 영향을 주는가? ④ 어떤 결정이나 지표가 바뀌면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는가? ⑤ 선거로 달라진 부분과 기존 산업 추세는 무엇인가?

사업계획은 **기본·일정 지연·부담 확대**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점검한다. 기본 시나리오는 현행법과 확정 계약을, 일정 지연은 승인·전력 접속·지원금 지급·발주의 지연을 반영한다. 부담 확대 시나리오는 관세와 안전·권리·보안 비용이 늘어나지만 고객에게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다. 각 시나리오의 영향은 실제 계약과 매출·비용·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표 4. 한국 산업별 기회·부담 요인과 주요 점검 지표

산업	기회 요인	부담 요인	주요 점검 지표
반도체·메모리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장기 공급 기회, 요건 충족 시 미국 데이터센터용 공급의 관세 면제, CHIPS 지원금 집행	주요 AI 고객에 대한 매출 집중, 고객 투자 조정과 완공 지연에 따른 출하 이연, 추가 관세와 대중국 수출통제	고객별 설비투자·현금흐름·확정 발주, 계약상 최소 구매 의무, 301조·232조 조치, 데이터센터 전력 접속 일정
통신장비·부품·시험인증	비중국 공급업체 수요, BEAD·C밴드·신규 지상망 구축에 따른 장비 발주, 오픈RAN·시험인증 사업 기회	원산지·공급망·지분 구조 증빙, 인증 전환 비용과 지연, 관세 부담과 중국 사업 위험	장비·시험기관 규칙의 확정 내용과 전환 기한, 고객 발주, 시험기관 인정·상호인정 범위
이동통신·위성·D2D	위성·지상망 연계 서비스와 제휴 기회, 미국의 주파수·인허가 제도를 참고한 국내 제도 검토	신규 위성 서비스와의 경쟁, 주파수·단말·망 연동 비용, 국내 허가와 간섭 조정의 불확실성	SCS 최종 규칙, 주파수 거래 승인 조건, 실제 서비스 지역·가격·단말 지원, 국내 주파수 공급 계획
콘텐츠·플랫폼	권리 관계가 명확한 IP의 라이선스 기회, NO FAKES 성립 시 적용 요건에 따른 보호 강화, AI 번역·더빙을 통한 현지화 비용 절감	대형 구매자와 독점 계약에 대한 의존, 무단 AI 이용 분쟁, 주별 규제 대응, 망 이용대가·개인정보 집행의 통상 쟁점화	NO FAKES·CLEAR 입법 내용, 주요 계약 갱신, 주법·관련 판결, USTR 보고서와 공식 후속 조치
배터리·에너지·전력기기	IRA·45X 지원의 추가 축소에 대한 의회 견제 가능성, 미국 발전·송배전·저장설비 수요, 대미 투자 사업의 기자재 공급 기회	미국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 지원 요건·지급 일정 변경, 외국산 설비 제한, 고객 사업 지연	45X 적격 요건, 확정 지원금·수주, 투자 사업의 승인·착공·조달 일정, 전력 비용 분담 규칙

산업	기회 요인	부담 요인	주요 점검 지표
금융·거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회 견제, 기업의 환헤지·투자금융 수요, 금융 AX의 업무 효율화 기회	특정 산업에 집중된 투자·대출 위험, 미국 AI 투자 조정,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성, 추가 관세 부담	고객·업종별 금융 노출, 미국 기업 투자·차입 여건, 금리·환율, 부채한도 협상과 품목별 관세
보안·사이버	AI 취약점 탐지·패치와 사고 대응 수요, 방어용 AI 활용, 정보공유법 연장 시 법적 안정성 개선	공공 예산 축소와 발주 지연, 주별 개인정보·보고 의무, 신규 AI 보안 의무의 적용 가능성	CISA 2015 연장, FISA 702 후속 입법·인증 범위, 확정 예산·조달, SIF 권고의 후속 조치

※ 정책·법안의 확정 여부와 기업별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 발표, 사업 승인, 계약 체결, 매출 발생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정책 과제 · 열 가지

1. 소유·겸영 규제의 핵심 원칙과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미국의 방송사 소유 상한 논쟁은 규제 내용뿐 아니라 이를 누가 변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도 통합미디어법 논의에서 소유·겸영 규제의 목적과 핵심 기준, 정부에 위임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한을 법률과 시행령 중 어디에 둘지는 규제의 중요성과 조정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정하되, 주요 변경에는 영향평가·의견수렴·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과방위 TF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6. 18. 발의)과 방미통위의 통합법제 의견수렴(5월), 지상파–OTT 비대칭 규제 개선 언급(10. 26.)이 이 쟁점을 다룰 자리다.

2. 합의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정상 운영을 제도로 보장한다. 기관의 독립성은 위원의 신분 보장뿐 아니라 인선, 정족수, 결원 대응, 의사결정 권한에 달려 있다. 위원 추천·임명 지연을 줄일 절차와 결원 시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사무국에 위임할 업무와 보고·재검토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품목별 합산 관세와 추가 부과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다. 한미 합의의 15%를 모든 관세의 누적 상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추가 301조 조치에 대비해 품목별 적용 세율,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면제·상쇄 조건을 협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 합산 상한을 확보하되, 합의의 적용 범위와 이행 수단, 변경 절차도 명확히 해 기업이 계약과 투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대미 협의를 행정부와 의회·주정부로 넓힌다.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에 더해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의 주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의 고용·전력·공급망 기여는 사업별 자료로 제시하고, 국내 개인정보·플랫폼 규제는 적용 기준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공화·민주 양당과 관련 지역을 함께 포괄하는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 디지털 규제의 통상 대응 원칙을 정리한다. 망 이용대가, 개인정보 제재, 플랫폼 규제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통상 대응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책 목적과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의 USF·전력 비용 분담 논의와 주별 개인정보 규제는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도별 부과 근거와 대상이 다른 만큼, "미국도 규제한다"는 주장보다 한국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일관된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6. D2D의 면허·제휴 조건과 주파수 공급 계획을 정비한다. 위성–휴대전화 직접 연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과 위성사업자가 직접 면허를 확보하는 방식 등을 비교해 설계해야 한다. 공동사업이나 제휴는 면허 방식과 별개의 선택지다. 간섭 방지, 긴급통신, 이용자 보호와 비용 부담을 먼저 정하고, 재난·음영지역·해상 등 용도별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규칙 제안과 해외 서비스 사례(일본 3사의 D2D 개시, 미국 3사의 합작사 추진)는 참고하되 국내 적용 조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파수 공급 일정도 로드맵과 변경 사유·절차를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7. 보편서비스의 필요 재원과 분담 기준을 함께 재검토한다. 미국 USF 논의는 기존 통신 매출 중심의 재원 조달이 지속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 한국도 보편서비스의 대상과 비용을 먼저 산정한 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지 검토해야 한다. 매출·회선·트래픽 등 기준별 장단점과 소비자 전가, 이중 부담, 징수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편서비스 재원과 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은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 다뤄야 한다.

8. 전력망 확충과 데이터센터 입지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AI·반도체 투자를 유치하려면 부지뿐 아니라 전력 공급 시점과 비용이 구체화돼야 한다. 산업단지·데이터센터 계획을 발전·송전망 확충과 연계하고, 접속 가능 용량과 예상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협의, 환경·용수 영향, 비용 분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의 선투자는 수요의 확실성과 설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9. 위협정보 공유의 법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사고보고를 연계한다. 위협정보 공유는 면책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두고, 반복적인 제도 공백을 줄여야 한다. 사고보고는 공통 항목과 제출 창구를 연계해 한 번의 신고로 여러 기관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되, 기관별 추가 요구와 정보 접근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운영기업에는 방어용 AI의 시험·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 검증과 민감정보 보호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10. AI 권리 보호와 중소기업의 도입 성과를 함께 지원한다. 디지털 복제물의 동의·이용·구제 기준과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적용을 명확히 해 계약과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AI 기본법의 세부 이행 일정에 맞춰 미국 주법·EU AI법과 중복되는 의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AX 지원사업은 도입 기업 수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의 참여, 처리시간·오류율·총비용 개선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업무 변화가 큰 업종에는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주요 결정 시점과 확인 사항

다섯 분야의 입법·예산·인허가·소송 일정을 정리했다. 우선 확인할 시점은 2026년 12월의 예산·정보공유법 연장,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3월 FISA 702 기존 인증 만료, 7월 주파수 경매 기한과 주요 재판 일정이다. 법정 기한과 발표된 일정, 향후 관찰할 사안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5. 주요 정책·사업 일정과 확인 사항 — 2026년 11월~2028년 12월

시점·상태	분야	주요 일정	확인할 결정과 영향
2026. 11. 9.~10. 예정	통신·미디어	D2D 관련 의견 제출 마감, FCC 위원 후보자 인준 청문회	제출 의견과 심사 쟁점, 후속 인준 표결 일정. 청문회 개최만으로 FCC 구성이 바뀌는 것은 아님
11. 9. 시행	금융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적용 범위·종료 시점, 증권사별 운영과 반대매매 추이
11. 15. 예정	통신	AT&T의 추가 구리망 퇴역 일정	대상 지역·고객, 대체 서비스와 전환 조건
11월 중순~12월 협상	전 분야	레임덕 의회의 NDAA·세출 협상, 아동안전·전기요금 보호 관련 법안 처리 논의	최종 법안에 포함되는 조항과 예산, 새 의회로 넘어가는 과제
12. 1. 전후 발효 예정	미디어	FCC의 39% 방송사 소유 상한 폐지 결정	집행정지 여부와 실제 적용 시점, 후속 소송
12. 10. 제출 계획	AI·전력	ERCOT 적격성 검증·지역 영향 보고	보고 결과와 프로젝트별 분류·접속 승인. 제출일과 접속 재개일은 구분
12. 11. 만료 기한	재정·사이버	임시예산과 CISA 2015 임시 연장 만료	예산의 연장·확정 여부, 정보공유법의 장기·단기 연장 또는 효력 공백
2027. 1. 3. 제도상 기준일	전 분야	제120대 의회 임기 시작	위원회 구성·위원장 선임, 감독·입법·인준 의제. 실제 회의 일정은 별도 확인
2027년 1월 이후 입법 관찰	AI·에너지	주요 주의 의회 회기와 새 주지사 취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의 법안 제출·성립 여부, 적용 대상·예외·기간
2027. 1.~2. 발표 확인	AI·반도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와 투자 계획 갱신	설비투자 규모·집행 시점, 자금조달, 공급업체 발주 전망

시점·상태	분야	주요 일정	확인할 결정과 영향
2027년 초 후속 안내 확인	AI	한국 AI 기본법 계도기간 관련 정부 안내	의무별 집행 일정과 준비사항. 시행 1년 경과를 계도기간의 자동 종료로 보지 않음
2027년 2월 전후 예정·확인	사이버·재정	SIF 검토 결과와 FY2028 대통령 예산안	AI 보안 권고의 후속 조치, CISA·선거보안 예산 제안. 권고·예산안과 확정 의무·예산은 구분
2027년 3월 인증 만료	사이버	FISA 702 기존 법원 인증의 효력 종료	후속 입법·인증 여부, 적용 범위와 기업의 협조 의무
2027년 3월 말 정례 보고	통상·콘텐츠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의 망 이용대가·플랫폼·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2027년 상반기 일정 미확정	미디어·통신	디즈니–FCC 소송, 소유 상한 관련 소송, 주파수 거래 심사, SCS 규칙·USF 입법 논의	법원·FCC·의회의 실제 처리 일정, 승인 조건과 기업 의무의 변경
2027. 7. 4. 법정 기한	통신	상부 C밴드 경매 관련 법정 기한	법정 대상 물량과 FCC 경매 범위, 낙찰액·대금 납부·주파수 이용 가능 시점
2027년 7월 잠정 일정	미디어	넥스타–테그나 관련 배심 재판	반독점 쟁점과 분리 운영·통합 일정에 미치는 영향. 소유 상한 소송과는 별개
2027년 중 관찰	미디어·콘텐츠·AI	LUC 후속 심사, NO FAKES 등 권리 보호 입법, 주별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	정치광고 단가 적용 범위, AI 권리 보호 요건, 주별 규제의 실제 성립·시행 여부
2027년 하반기 이후 사업 일정 확인	통신	BEAD 발주·공사, 위성 이동통신 구축, 에코스타 후속 거래	주별 계약·공사 진척, 거래 종결 조건, 실제 서비스 지역·품질·단말 지원
시점 미정 발표 확인	통상·반도체	301조 과잉생산 조사, 232조 반도체 후속 조치, SAFE Chips 입법	품목별 합산 관세·면제·상쇄 조건, 대중국 AI 칩 수출 범위
2027년 말 ~2028년 초 조건부	미디어·통신	FCC 고메즈 위원의 임기 후 재직 가능 기간 관련 일정	후임 임명과 회기 종료에 따른 FCC 구성 변화
2028년 중 사업 계획 확인	통신	스타링크의 자체 주파수 활용 서비스 계획	허가·구축 완료 여부, 상용화 시점과 경쟁 조건
2028년 11월 선거	전 분야	미국 대통령·의회 선거	차기 행정부·의회의 정책 방향. 실제 정책 전환은 취임·입법·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

시점·상태	분야	주요 일정	확인할 결정과 영향
2028년 12월 적용 기한 확인	통신·시험인증	중국 소재 시험기관 관련 전환 기한	대상 기관·인증의 범위, 대체 시험기관 확보와 고객별 전환 완료 여부

※ 일정은 연장·변경될 수 있다. 법정 기한은 현행 법령, 재판은 법원 명령, 사업 일정은 관계 기관과 기업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갱신한다. 소송·법안·사업 계획에는 완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

부록

정책 판정 기준과 분석 범위

정책 판정 기준

이 보고서의 판정은 정책의 적법성이나 시행 여부가 아니라, 선거 이후부터 2028년까지의 추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좌초·약화·지속·부상·상징적'은 추진력에 대한 전망이며, '미정'은 핵심 결정이 남아 있어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뜻한다.

판정	의미	주요 판단 기준
좌초	전망 기간 내 성립·추진이 어려운 정책	필요한 입법이나 재원 확보가 어렵고, 의회 내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 등을 넘기 어려움
약화	추진은 가능하지만 범위나 속도가 제약되는 정책	법적 근거에 대한 다툼, 의회 감독, 예산 제한, 소송 등으로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큼
지속	기존 정책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	현행법과 기존 결정에 근거하며, 선거만으로 방향이 바뀌기 어려움. 다만 후속 승인·예산·소송의 영향은 별도
부상	의회의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책	감독·인준 권한, 예산 협상 또는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논의와 추진이 확대될 전망
상징적	논의는 이어지지만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제	입법 장벽이 높아 당장의 시행보다 정책 방향 제시와 향후 선거 의제화의 의미가 큼
미정	핵심 결정이 남아 있어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조사 결과, 적용 범위, 세율, 허가 조건 등 관계 기관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음

※ '좌초'는 이미 추진된 정책의 성립·집행 전망에, '상징적'은 향후 입법·공약 의제에 주로 사용했다. 모두 보고서의 분석 판단이며 법적 효력에 대한 판정은 아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 11. 8.이다.

판정을 읽는 방법

각 정책은 **현재의 법적 상태, 향후 추진 전망, 판단을 바꿀 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적 상태는 시행 중, 확정·시행 전, 규칙 제안, 법안, 공약, 소송 중 등으로 본문에 표시했다. 표결·최종 규칙·법원 결정·예산 확보 등 주요 확인 사항은 06장 일정표에 정리했다.

예를 들어 위성 D2D의 일부 규제 완화가 '지속'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해당 방안이 규칙 제안 단계라면 최종 면허 조건까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독자적인 확률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외부 전망의 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처와 산정 근거의 공개 여부를 함께 밝혔다.

분석 범위와 자료 기준

분석 범위와 자료 기준

자료 기준일은 **2026년 11월 8일(한국시간)**이다. 공개된 선거 결과, 규제·법원 문서, 기업 공시, 시장 자료와 언론 보도를 활용했다. 일부 선거구는 개표가 진행 중이므로 의석수는 최종 확정치와 다를 수 있다. 정책 판정은 정량 모델이 아닌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다. 분야별 리포트의 판단을 바탕으로 종합했으며, 별도 판정이 없었던 콘텐츠·거시통상 분야는 종합편에서 평가했다. 기초자료 7건의 목록과 활용 범위는 별지에 제시했다.

수치가 다른 경우에는 원출처와 기준일, 집계 범위를 확인해 선택했다. 분기별 USF 기여율, 확보·예상 의석, 정치광고 전망치처럼 기준이 다른 수치는 단순한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차이를 구분했다. 주요 선택 근거는 별지와 검토 메모에 기록했다. 시장·기업 자료는 다음 기준으로 해석했다. **주가**는 장중 가격과 종가, 하루 변동률과 여러 날의 누적 변동률을 구분하고 해당 도표에 기준을 표시했다. **설비투자**는 기업별 회계연도와 리스 포함 여부가 달라, 기준을 통일하지 않은 합계는 참고치로만 사용했다. **정책·사업 계획**은 정부 목표와 기업의 투자 발표를 실제 집행·수주·실적과 구분했다.

주요 출처 (분야별 리포트의 출처 목록을 통합한 요약)

1. 선거 결과·의회 전망: AP(PBS NewsHour), CBS News, NBC News, CNN, CNBC, U.S. News, Al Jazeera, Yahoo/AP 집계 (2026. 11. 3.~5.) · Wiley, Bloomberg Government, R Street, Legal 500, Washington Technology, IAPP, Nextgov/FCW, TIME (11. 4.~6.)
2. 미디어·방송: FCC 26-53·DOC-423139A1·DA 26-68·DA 26-376 · Nielsen The Gauge(2025. 6., 2026. 9.~10.) · AdImpact·TV Technology(2026. 6.) · Skydance SEC 8-K(10. 6.) · NPR·The Desk·Light Reading·Free Press·Variety·Reuters·Venable·Semafor·KUNC(CPB) · Deadline·Forbes(11. 4. 시장 반응)
3. 네트워크 통신: FCC 26-46(상부 C밴드)·26-19(구리망)·26-28·DA 26-278·DA 26-946(USF 42.0%)·10. 29. 의제 · NTIA 보도자료(2. 2026, 8. 25.) · Wiley(OBBB) · Broadband Breakfast·Light Reading·Fierce·Telecompetitor·SatNews·Via Satellite·CNBC·NBC News·CBS News·Forbes·Capacity·TechTimes · CRS IF13280·R47621 · Benton(706 보고서) · ILSR · Senate Commerce·House E&C 보도자료(크루즈-워너, 팰런-거스리, SAT Streamlining) · KISDI(2024. 12.)·KISA(2025. 6.·8.)·EBN(11. 4.)
4. AI·AX·통상: Hunton·GovInfo(EO 14318·14363·14365) · Introl · TechCrunch·Nasdaq(H200) · Thomson Reuters·White & Case(232조) · DLA Piper·Troutman(IEEPA 판결) · Dorsey·Z2Data(301조) · Korea Herald·Korea Times·Asia Financial·Herald Business(한미 관세) · U.S. Census BTOS(2026. 5.) · Utility Dive·POWER·DCD·Energy News Beat(ERCOT·BNEF) · EIA(Reuters) · Meta 8-K·MarketBeat·Constellation·InsiderFinance·Investinglive·Forbes(CapEx) · TrendForce·XenoSpectrum·산업통상부·머니투데이·SBS Biz·뉴시스·노컷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5. 사이버보안: The Record·Nextgov·Federal News Network·Roll Call·GovTech·CNAS(CISA 2015) · NPR·ABC News·AP·ASA(FISA 702) · The Next Web·FDD·AJC·Route Fifty·GovInfoSecurity(CISA 감축·선거보안) · Washington Technology·Infosecurity·Skadden(사이버 전략) · Paubox(CIRCIA) · Federal News Network·Jenner·Bright Defense(CMMC) · TechSpot·Network World(CALEA) · Akin Gump·CBS·PBS(SIF) · Axios·MeriTalk·ISOC(프론티어 AI) · MultiState·Bloomberg Government(프라이버시) · Korea Herald·Retail Insight·Public Citizen(쿠팡) · WWT(11. 2026)
6. 시장 반응(11. 4.~8.): CNN(11. 5.~6.), CNBC(11. 4.~6.), NPR(11. 5.), Reuters(11. 6., 민주당 AI 입법 계획·시장), Yahoo Finance·Investing.com·Fox Business·STL.News, TechTarget·Goldman Sachs 추정(Reuters 인용)·Jefferies·IDCA · 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뉴데일리·인천일보·톱스타뉴스·뉴스핌·데일리안·허프포스트코리아·한국경제TV·디지털타임스(11. 6.~8.)
7. 콘텐츠·거시: 한국콘텐츠진흥원(2026 전망) · 머니투데이·지디넷·디지털데일리·이투데이·한국경제(망 이용대가) · Manatt·Paul Hastings·SAG-AFTRA·Copyright Office(NO FAKES·AI 공개 법안) · KIEP·SBS Biz·연합인포맥스(부채한도) ·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미래연구소 Digital Future Institute · dfi.re.kr · DFI 프리미엄 리포트 「美 중간선거 이후의 산업 지형」 종합편 · 2026. 11. · 분야 리포트 ① 미디어·방송·플랫폼 ② 네트워크 통신 ③ AI·AX·데이터센터·반도체 ④ 사이버보안·디지털신뢰 ⑤ 콘텐츠·IP, 배경 리포트 거시·통상·금융과 함께 읽을 것